

1920~1930年代 韓國의 經濟學風과 經濟研究의 動向： 延專 商科 및 普專 商科를 중심으로

李 秀 日

본고는 1920~1930년대 延專 商科와 普專 商科의 학풍을 검토함으로써 日帝下 韓國 經濟學者들의 연구동향과 현대 한국경제학의 前史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글이다. 이 시기 한국의 경제학풍은 일제강점이라는 시대적 조건상 그리고 경제학의 학문적 특성상 民族解放의 실천적 움직임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으면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경제학풍은 대체로 자본주의 국가건설과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이념적·사상적 기반을 제공하는 '자본주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으로 분립되었다. 일제 강점기 열악한 학문연구의 환경 속에서 두 계통의 경제학풍을 선도했던 곳이 바로 延專 商科와 普專 商科였으며, 兩校의 경제학풍을 검토하는 일은 우리 나라 초기 경제학 발달사의 특질을 이해하는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 방면의 연구는 韓國 近現代思想史·學術史의 차원에서 보다 정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 머리말

19세기 말 우리 나라 思想界가 직면한 역사적 과제는 주체적인 '近代化'를 추구하면서 '國權侵奪'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론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理論과 方法論은 여러 갈래의 전통적인 개혁사상과 서구사상이 충돌,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모색되었다. 서구의 근대적인 經濟學과 經濟思想도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한말에 수용되었고, 일제하에 본격적인 연구·천착이 이루어졌다.

일제하 한국인들의 경제학 연구는 주로 1910~1920년대 일본이나 미국의 정규대학에서 체계적인 경제학 교육을 받은 인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제강점이라는 객관적 조건으로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경험이 학문영역이나 산업활동 분야에

서울시립대 강사, 서울시 전농동 90번지, 130-743.

서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학적 토대는 일천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 한국의 經濟學風은 경제학의 학문적 특성상 민족해방이라는 실천적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경제학 연구자들이 실천운동에 투신하기도 하였다. 1920~1930년대 민족해방운동 진영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운동적·사상적 분화 속에서 한국 경제학풍은 대체로 자본민족주의 진영의 국가건설론을 추구하는 '資本主義 經濟學' 과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社會主義 經濟學' 으로 대립 공존하고 있었다. 두 흐름의 경제학풍은 反日이라는 측면에서 공동의 보조를 맞출 수 있었지만, 新國家 建設의 방법을 둘러싸고 이념적 대립 갈등의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대립 갈등은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해방을 맞게 되고,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치달린 좌우대립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두 계통의 경제학풍은 각각 '南·北韓의 體制理論' 으로 化하였다.

따라서 일제하 한국 경제학계의 학풍과 경제학자들의 연구동향을 검토하는 일은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성과물이 제출되었다.¹⁾ 본고에서는 그 같은 先學의 연구성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일제하 한국 경제학풍을 선도했던 延專 商科와 普專 商科의 경제학풍을 검토함으로써 이 시기 한국 경제학계의 이론적·실천적 동향과 초기 경제학 발달사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II. 1920~1930년대 延專 商科 및 普專 商科와 學術運動

개항 이후 兪吉濬등 개화파 지식인들이 서구의 사회경제 일반을 소개한 이래 우리나라에서 서구의 근대적인 經濟學이나 經濟思想에 대한 전문 서적이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한 때는 대체로 1907년을 전후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²⁾ 이 시기에 나온 經濟學이나 商學關係 저서의 저자들은 대개 1890년대 官費日本留學生 출신³⁾의 普專 교수·강사와 그 제자들인 普專 理財學科 출신자들이었으며, 신해영(『經濟學』, 1907),

1) 대표적 논고로서는 安秉直 [84], 李基俊 [76], [77], 高麗大學校 [78], 趙璣濬 [85], 方基中 [82], [95], 홍성찬 [93], [94] 등이 있다.

2) 한말 서구 경제학 교육과 도입에 대해서는 安秉直 [84], 李基俊 [76], [77], 高麗大學校 [78], 趙璣濬 [85] 참조.

3) 이들은 대개 日本의 專修學校 東京法學院 慶應義塾 등에서 經濟學이나 商學, 法學을 접했으며, 특히 普專 교수나 강사들은 대개 專修學校 출신이었다(李基俊 [77], 趙璣濬 [85] 참조).

원웅상(『經濟學』, 1907:『財政學』, 1910), 김상연(『經濟學』, 1910), 유승겸(『最新經濟教科書』, 1910), 김대희(『商業汎論』, 1907), 채기두(『法律經濟辭意通解』, 1908), 박승회(주정균과 공저, 『最新經濟學』, 1908), 주정균(『最新經濟學』, 1908), 변영만(『二十世紀大慘劇帝國主義』, 1908), 이필선(『普通經濟學』, 1907), 윤성희(柳興世와 공저, 『韓國稅制考』, 1909), 유치형(『經濟學』, 1907)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이 일본 학자들의 책을 번역하거나 그것을 참조하여 저술했으며, 고전파 경제이론·신고전파 이론·독일 역사학과 및 사회주의 등 당시 서구 경제학의 이론과 사상을 총망라하여 소개하였다.⁴⁾ 아울러 이들은 이 시기 계몽운동의 여러 단체와 연결되어, '近代化', '國權恢復'의 구체적 방안으로 서구의 경제이론이나 경제사의 개념에 기초하여 '殖産興業'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⁵⁾

普成專門學校가 한말 국권침탈의 위기 속에서 '興學'의 기치하에 서구의 근대적 經濟思想이나 經濟學의 초기 수용과 교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⁶⁾ 1920~1930년대 한국 경제학의 흐름은 延專 商科를 軸으로 전개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인 서구 경제학의 연구와 현실분석은 1920년대 초중반부터 이루어졌는데, 1910년대 일본이나 미국유학을 통해 서구 경제학의 학문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점차 귀국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이 무렵부터 서구 경제학의 체계적인 학적 기반을 갖춘 인적 자원이 미미하지만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이라는 객관적 여건상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1920년대 經濟學 및 商學教育이 일본인 교수 일색인 官立의 京城帝大나 京城高商 아니면 私立의 延專이나 普專에서 이루어졌던 현실 속에서 이들의 학계진출이나 전문적 연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대부분의 경제학 전공자들이 언론·문화·실업 활동에 종사하면서 경제학 연구를 겸하였다. 일제 강점하에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식민지 상황 그 자체가 경제학 교육과 연구의 정상적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했던 요인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延專과 普專의 경제학풍은 일제하 열악한 韓國 經濟學界의 방향을 주도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하 延專에는 李順鐸·白南雲·盧東奎·趙炳玉·崔淳周·洪承國·申泰煥, 普專에는 白象圭·洪性夏·李寬求·金洸鎮·朴克采·尹行重 등이 포진하면서, 한말 이래 도입된 서구 경제학의 교육과 학문적 체계를 다듬어 갔다.

그런데 經濟學이 현실 사회경제의 지반 위에 성립, 발전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일제하 한국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民族解放과 新國家建設, 民族經濟의 樹立이라는 실

4) 安秉直 [84], 李基俊 [76], [77], 高麗大學校 [78], 趙璣濬 [85] 참조.

5) 李基俊 [77] 참조.

6) 高麗大學校 [78] 참조.

천적 요구와 불가분의 관련성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많은 지식인들이 실천운동에 투신하기도 했지만, 학문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일제의 파쇼적 이념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만 하였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한국인들 사이에 고조된 反日·反帝사상을 제압하고 한국지배를 학문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론체계의 수립을 '統治의 急務'로 인식하고,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공세를 강화해 갔다. 즉, 일제의 官學 經濟學은 식민통치를 미화하면서 일본자본의 무자비한 수탈을 '朝鮮의 近代化' 과정으로 합리화해 갔다.⁷⁾ 따라서 일제하 한국인의 경제연구는 일제와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학문에 반대하는 反日·反官學의 입장에서 추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反日·反官學의 경제 학풍은 민족해방과 국가건설의 구체적 방법과 지향에 따라 사상적·이론적 틀을 달리하였다. 이는 이 시기 民族主義와 社會主義로 분화되기 시작한 조선 사상·운동계의 동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성향의 자본주의 경제학과 맑스주의 경제학으로 분화되어 일제하 해방정국기에 걸쳐 공존·대립하였다.

1920년대 경제학풍의 분화에는 두 측면에서 사상·운동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1920년대 일제의 조선지배 정책이 본 궤도에 올라갔다는 점이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완료와 더불어 금융자본의 지배구조를 확립하면서, 조선 사회를 식량원료공급지·상품판매지·자본수출지로서 조직적으로 짜맞추어 갔다. 이러한 식민지 농업수탈과 자본지배가 강화됨에 따라 反日·反封建·反資本主義的 성격의 勞農運動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민족 내부의 계급적 대립도 확대되어 갔다.⁸⁾ 이는 사회주의 유입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둘째는 제1차대전 이후 전세계를 풍미했던 '改造思想'의 영향을 들 수 있다.⁹⁾ 개조사상은 세계전쟁을 야기한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평화로운 신세계 질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의 산물이었다.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결함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은 전후 세계 사상계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대체로 당시 제기된 改造思想에는 크게 자본주의의 개량사상(勞資協助主義·文化主義·民主主義 등)과 反資本主義 변혁사상(불세비키즘·무정부주의·생디칼리즘·사회민주주의·기독교사회주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후자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제국주의(=자본주의) 지배하에 있던 植民地·半植民地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1920년대 경제학 전공자들이 대부분 1910년 중후반에 일본유학을 했다는 점에서, 그 시기 '大

7) 金容燮 [83], 方基中 [82] 참조.

8) 金容燮 [79], pp. 373~390.

9) 이 시기 改造思想에 대해서는 박찬승 [80] 참조.

정데모크러시'라는 일본의 改造運動의 사상적 동향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일본자본주의는 제1차대전이라는 戰爭특수의 호경기를 등에 업고 급격한 자본 발전을 구가했지만, 그 이면에는 米騷動이나 무산계급운동의 흥기와 같은 노자간의 계급대립, 농업·농민 문제의 모순이 전면으로 노정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사상운동계 내부에는 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까지 다양한 사상적 색채를 보였으며, 특히 사회주의등 反資本主義 사상이 급격히 전파되고 있었다.

따라서 3·1운동 후 조선의 사상운동계도 전통적인 근대화 개혁운동과 이 시기 유입된 다양한 개조사상과 서구사상이 맞물리면서 사상적·운동적 분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이 시기 지식인 운동가들의 현실인식이나 학문관의 분화는 필연적이었다. 한말 이래 수용된 社會進化論과 大正데모크러시기의 文化主義·自由主義에 기초한 민족주의 우파의 資本主義 國家建設論(1920년대 문화운동론·실력양성론)이나 조선 후기 이래 농민적 실학적 변혁사상(大同思想), 토지개혁론의 전통 속에서 이 시기 反資本主義 사상과 결합된 社會主義 國家建設論은 그러한 분화의 기본축이었다.¹⁰⁾ 말하자면 1920년대 초중반은 사상운동계 내부에서 민족해방운동의 분화가 일어나는 시점이었고, 식민지 사회현실의 객관적 분석을 전제로 하는 경제학 연구는 그러한 분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그러한 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이는 延專이나 普專의 경제학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미션학교인 延專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미국적 자유민주주의의 분위기가 깊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연전 商科학풍의 한 축은 그것에 기초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白象圭(브라운大 출신)¹¹⁾·趙炳玉(콜럼비아大 출신)·洪承國(오하이오주립大 졸)·崔淳周(뉴욕大 출신)¹²⁾ 등 당대 최첨단의 미국 유학생 출신의 경제학자들이 자연스럽게 대거 포진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反日 民族運動의 일환으로 수양동우회나 흥업구락부, YMCA 등 기독교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연희전문 출신들은 아미리가(미국-인용자)로 유학을 가는 것이 특색”¹³⁾이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었다.

延專 商科의 또 하나의 학풍은 1923년 延專에 부임한 '朝鮮의 카와카미(河上肇)'라고 불리던 민족적 사회주의자 李順鐸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¹⁴⁾ 1920년대 중반 延

10) 金容燮 [79], 방기중 [82] 참조.

11) 일제하 東亞日報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金乙漢의 회고에 의하면,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백상규의 깔끔한 양복차림과 청교도풍의 엄격한 자기절제가 인상적이었다고 회상하였다(金乙漢 [75] 참조).

12) 당시 좌익성향의 한 기자가 崔淳周를 “이론보다 실제에 치중하는 反派시스트이자 말사스 신봉자로, 洋風을 대단히 좋아하는 아메리칸리즘에 심취한 사람”이라고 평하였다(漢陽學人 [62], p. 44).

13) [64], p. 23.

14) 李順鐸의 경제사상과 현실인식에 대해서는 홍성찬 [94] 참조.

專 학감 俞億兼의 주도로 연전 商科의 교수진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東京商大를 졸업한 白南雲이 그리고 趙炳玉의 후임으로 1930년 盧東奎가 부임하면서, 延專 商科의 사회주의 경제학풍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 입으로 사회주의를 운운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청년으로 간주될 정도였는데, 특히 1920년대 말~1930년대 초반 세계공황과 파시즘의 대두라는 객관적 정세와 이들의 학문적 성향이 결합되면서, “延專 文科가 唯心的이라면 延專 商科는 唯物論的”¹⁵⁾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실제로 ‘경제이론 및 실제문제의 討究와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商科 교수와 상과 학생들을 전부 포괄한 학내 학술연구 단체인 <經濟研究會>도 맑스주의를 주류적 흐름으로 깔고 있었다.¹⁶⁾ 이로써 일제하 延專 商科의 학풍은 자본주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 즉 미국 유학생의 실무적·기술적·합리적 경향과 일본유학생 출신의 理論的·史的인 연구경향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⁷⁾

한편 普專의 경우, 1922년 私立普成法律商業學校에서 財團法人普成專門學校로 승격되면서, 1920년대 상학 교수로 金永柱(동경상대 졸, 상학담당), 洪性夏¹⁸⁾(중앙대학 졸, 경제학·재정학 담당), 白象圭(경제학·영어 담당) 등이 활동하였다. 금융화폐론을 전공한 洪性夏는 사회주의 경제학에도 조예가 있었지만,¹⁹⁾ 기본적으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성향을 취하였다. 1932년 3월 東亞日報 사주 金性洙가 재정난에 빠진 보성재단을 인수하면서 교수진을 강화했는데, 이 때 俞鎮午(경성제대 졸), 崔容達(경성제대 졸), 金洸鎮(동경상대 졸), 朴克采(경도제대 졸), 尹行重(경도제대 졸) 등 1930년대 신진의 맑스주의 학자들이 대거 기용되었다. 이러한 교수층원에 힘입어 普專에서는 경성제대 法文學會의 官學연구에 대항하고 反日·反官學 학술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하에 1933년 <普專學會>를 조직하고 학술지 「普專學會論集」(1934년)을 간행했으며,²⁰⁾ 金洸鎮·朴克采가 조선경제사나 이론경제에 대한 무게 있는 논문을 발표하였다.²¹⁾

15) 漢陽學人 [62], p. 42.

16) 經濟研究會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는 홍성찬 [93] 참조.

17) 홍성찬 [93] 참조.

18) 1923년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東萊고보를 거쳐 일본 中央大學을 졸업하였다. 1922년~1939년까지 보성전문학교 상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해방 후 韓國民主黨의 이론가로 활약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에 반대했고 농지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19) [65], [66] 참조.

20) 普專學會의 『普專學會論集』은 모두 세 차례(1934, 1935, 1937) 간행되었고, 논집의 구성은 제1부 法律及政治, 제2부 經濟及商業, 제3부 文學及哲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普專學生會>에서는 학생회 회지로 “현실의 모든 사실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비판하여 그 본질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 우리 학도의 첫 임무”라는 취지하에 「普專學生」을 1936년에 간행하였다. 한편 俞鎮午의 회고에 따르면, 「普專學會論集」이 발간되자 당시 일본 언론에서는 京城帝大의 ‘官學派’에 대항하는 ‘私學派’가 대두했다는 논평을 했다고 한다(俞鎮午 [102], p. 55).

이처럼 1920~1930년대 延專 商科와 普專 商科의 학풍은 자본주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으로 분화되어 있었지만, 그와 같은 상이한 두 계통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反日·反官學의 입장에서 서로의 학문적 존재를 인정하면서 공존할 수 있었다. 특히 1920년대 중후반 비타협 民族主義와 社會主義 사이에 진행된 民族協同戰線 結成의 움직임이 진행됨에 따라, 두 흐름의 경제학풍은 反日·反官學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상호 연대의 폭을 넓혀 갔다. 근본적인 學問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延專 商科 및 普專 商科에 내재된 두 흐름은 식민지 조선현실에 대한 객관적 파악과 그에 기초한 민족해방의 전망이라는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사회·학술운동에서 긴밀한 협동체제를 이루어 갔다.

1920년대 학술·사회운동에서의 그러한 동향은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크게 자극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1920년대 중반 사상운동계의 동향과 긴밀한 관련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민족주의 우파가 '先實力養成 後獨立'이라는 實力養成運動에서 '自治運動'으로 나아가면서 정치적인 타협화·개량화로 치닫자,²²⁾ 이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좌파(비타협 민족주의계열)는 사회주의 세력과 民族協同戰線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²³⁾ 이러한 민족운동계의 분화와 民族協同戰線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 같은 戰線統一 운동의 기초적 작업으로서 식민지 조선사회의 제반 상황을 과학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사회운동계에서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理論과 實踐의 統一'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지식인의 생명이라면, 식민지 현실은 이러한 욕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객관적 조건이었다. 이 시기 사회운동계에서 제기된 '과학적 인식과 이론의 필요성'은 경제학자를 비롯한 학술 연구자들에게 부과된 역사적 과제였다. 게다가 많은 典籍들이 일제의 통치하에 열람마저 용이한 일이 아니었으며, 현실의 경제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말해 주는 이용가능한 자료나 통계는 모두 일제가 한국지배를 목적으로 조사, 정리된 것들 뿐이었다. 그러한 일제의 통계와 자료를 따라가면, 결국 일제의 통치논리에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일제하 학술 연구자들은 먼저 조선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文獻과 資料·統計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정리 그리고 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는 1920년대 일제의 강점정책의 고도화와 더불어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강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제는 3·1운동 이후 고조된 反帝意識, 그리고 새로운 민족해방운동의 조류로서 급격한 세를 확장하고 있던 사회주의를 봉쇄하기

21) 金洸鎮 [11], [12], 朴克采 [14].

22) 박찬승 [80] 참조.

23) 이균영 [81] 참조.

위해서도 한국지배를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지배논리의 정비와 선전에 주력하였다. 그것은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민족분열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京城帝國大學 법문학부의 '조선경제사 연구'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킬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제국주의 학문체계였다.

1924년 '帝國의 文運에 공헌하는 忠良한 皇國臣民의 인재양성'과 일본 '官學 아카데미즘'에 기초한 '植民學 연구'의 진작을 표방하면서 설립된²⁴⁾ 경성제대의 법문학부 교수들은 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를 비롯한 학회와 연구조직을 통해 植民學 연구에 매진했는데, 특히 동경제대 官學 經濟學의 세례자인 四方博과 大內武次 등은 경성제대 官學의 경제학풍을 이끌어 갔다. 이들은 일본 사회정책학파가 내건 '허심탄회한 태도로서 사실에 입각한다'는 實證主義 反맑스주의적 이념과 연구방법론²⁵⁾에 입각하여 법문학부내 朝鮮經濟研究所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統治를 위한 朝鮮經濟研究'에 들어갔다. 朝鮮經濟研究所는 당시 한국인들의 反日·反帝的 朝鮮觀을 '獨斷論', '센티멘탈한 希望論'으로 치부하면서, 한말·일제하에 이르는 한국의 사회·경제 전반에 관한 연구자료를 수집·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해 갔다.²⁶⁾

四方博등이 방대한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검출한 朝鮮觀은 '구래의 한국사회를 부패된 사회, 정체된 사회로 파악하고 식민통치하의 한국사회를 성장하는 사회발전적인 사회'였으며, 강점 후 20여 년 동안 조선사회는 生産力의 비약적 발전, 즉 '産業革命'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았다.²⁷⁾ 막대한 일본자본이 투하된 결과, 한국에 비로소 자본주의적 경제조직이 마련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룩된 生産力의 비약적 發展이야말로 일제의 '善政'을 증명해 주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朝鮮經濟研究所는 한국사회의 제모순을 통계적·수량적 지표를 통해 은폐하고, '躍進朝鮮' = '近代化' = '資本主義化'는 다름아닌 '總督의 善政'이라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통계적 방법을 통해 검출한 '조선경제의 發展'은 일제 당국이 항상적으로 '자랑스럽게' 선전하던 시혜론적 관점의 '植民地 近代化論'이었으며, 이후 日人들의 '帝國主義

24) 경성제대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經濟學風에 대해서는 장세운 [91], 李秀日 [96] 참조.

25) 獨逸 歷史主義 學派의 일본적 變形인 日本社會政策學派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방임주의는 물론이고 자본주의의 생성·발전·몰락 과정을 규명하고 사회혁명의 한 수단으로 경제이론·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맑스주의 경제학은 '학문상의 暴力團'으로 간주하면서, 철저하게 배격하였다(住谷悅治 [59], p. 244). 또한 四方博은 白南雲의 『朝鮮社會經濟史』에 대해 '맑스주의 공식론의 고수와 사료비판의 불완전성'에 따른 '추론 억측에 기초한 斷定으로의 비약'으로 '객관적인 사료의 취급과 활달한 시야의 전개에 결정한 장애가 되었다'고 비판하였다(四方博 [61], p. 385).

26) 대표적 연구 결과물이 『朝鮮經濟の研究』(刀江書院, 1929)와 『朝鮮社會經濟史研究』(刀江書院, 1933)이다. 전자는 강점 이후 한국경제의 실정을, 후자는 강점 직전 조선후기의 경제상태를 광범한 통계적 수치를 이용하면서 한국 강점의 역사적 정당성을 도출하였다.

27) 四方博 [60], pp. 257 ~ 258.

的 朝鮮觀'의 근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官學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로 인해 민족주의 좌파 및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조선의 실정을 과학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민족해방운동의 차원에서도 그러한 官學의 허구성을 철저히 분쇄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1920년대 조선의 학술 사상계가 처한 주객관적 상황 속에서 조선의 실정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연구는 지식인들에게 부과된 과제였다. 그 최초의 조직적 움직임이 1925년 9월 민족주의 우파의 自治論에 반대하며 향후 民族運動의 이론적 지도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전망하면서 조직된 朝鮮社會事情研究會였다.²⁸⁾ 조선사회사정연구회는 일본 및 미국유학의 경험이 있는 언론 학계의 비타협적 민족주의 인사 및 사회주의 성향의 인사 20여 명이 "복잡한 실재운동을 떠나서 현하 조선의 사회사정을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널리 사회에 소개하며 때로는 필요한 자료를 그 수요자에게 공급"²⁹⁾할 목적으로 만든 연구단체로서, 俞億兼·白南雲·李順鐸(이상 연전 상과), 李灌鎔(연전 문과), 洪性夏(보전 상과), 鮮于田(보전·연전 강사), 李肯鍾³⁰⁾(경성법전 교수) 등 연전 및 보전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³¹⁾ 창립선언³²⁾에 나타나 있듯이 조선사회사정연구회는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조선역사와 민족성을 연구하여 민족정신의 유지에 노력한다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전면에 표방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자체를 배격하지는 않았다. '극단적 공산주의 배격'이란 조선사회의 구체적 실정을 돌아보지 않고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극좌적 움직임에 대한 비판일 뿐, 安在鴻·李順鐸·白南雲·洪命燾·洪性夏·李灌鎔·韓偉健·李灌鎔 등 조선사회사정연구회의 중심 인물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보완적 측면에서 상호의 장점을 취하여 조선의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다.³³⁾

28) 朝鮮社會事情研究會에 대해서는 고정휴 [88], 朱赫 [89], 김상태 [90] 참조.

29) [67] 참조.

30) 1897년 충남 연기생으로, 경성고보를 거쳐 1917년 경성법전을 졸업하였다. 일본 明治大學을 거쳐 콜럼비아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조선내의 은행」(1925)으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귀국 후 경성법전 교수, 화신백화점 과장,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31) 그 외 연구회의 주요 회원으로 白寬洙·金松殷·安在鴻·金起田·崔斗善·金俊淵·韓偉健·鞠錫烈·洪命燾·崔元淳·朴慶熙·金秀學·李春昊·鮮于田·朴昇岳·白南薰 등이 있었다.

32) 朝鮮社會事情研究會는 "극단적인 共產主義를 주장하여 외국의 제도·문물·학설 같은 것을 곧바로 채택하여 조선에 통용 실시하려는 것과 같이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나 조선에는 조선의 역사가 있고 독특한 민족성이 있다. 그와 같은 것은 조선민족을 자멸로 이끄는 것이므로 능히 그 가부를 연구하여 장점을 취해 民族精神의 保持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창립방침을 표방하였다(慶尙北道警務局 編 [72], p. 47).

33) 이 점은 이들이 이 시기 제기되고 있던 민족협동전의 요구를 깔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이 신간회의 발기인으로 참가했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이 시기 이들의 사회주의는 1930년대 '전투적 볼셰비키즘'이 아닌 '民族的 社會主義'로 파악될 수 있다.

조선사회사정연구회는 李瓊鎔·李肯鍾 등이 주관한 잡지 「現代評論」과 「東方評論」 등을 통해서 그 연구성과를 발표했는데, 특히 연구회의 설립이념을 편집기조로 삼은 「現代評論」은 사실상의 기관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학술활동의 초점은 조선의 정치경제적 실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회원들이 조선사회를 법제·금융·교육·상업·교육·공업·농업으로 분담, 연구하여 매월 말 토요일에 결과보고회를 가졌다.³⁴⁾ 「現代評論」에 나타난 조선사회사정연구회의 연구 성과물은 ① 민족협동전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② 자치운동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정치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③ 일본자본의 지배로 총체적 몰락의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인 경제의 부흥을 모색하는 것, ④ 전후 세계정세와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소개하는 것 등³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논조가 조선사회에 대한 과학적 진단, 대책과 그에 기초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협동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자치론에 반대하고 새로운 민족운동의 방향을 모색, 준비하기 위해 조직된 조선사회사정연구회는 1927년 민족협동전선체인 신간회의 창립과 더불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1931년 신간회의 해소로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였다.

1930년대 초 일제가 세계대공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준파시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학아카데미즘'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었으며, 또한 신간회 해소, 민족협동전선운동의 결렬 이후 조선의 사상운동계의 좌우대립이 첨예화되고 있었다. 아울러 조선경제의 현실은 대공황의 여파로 끝없는 파멸상태를 보이고 있었기에, '조선사회를 과학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요구와 한차원 높은 학술운동의 조직화는 더욱 절실하였다.³⁶⁾ 이 시기 학술운동의 조직화는 白南雲의 주도로 설립된 朝鮮經濟研究會로 구체화되었다.

34) 1927년 11월 28일 종로 YMCA회관에서 제1회 조사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금융재정을 담당한 金秀學이 조선의 세금제도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朝鮮事情研究會 第一會調查報告講話」, 「朝鮮日報」 1925. 11. 30). 金秀學이 발표한 보고내용은 후일 조선사회사정연구회의 이름으로 「東方評論」 창간호(1932. 2)에 실렸다. 그 외 白南雲·鮮于全·李肯鍾 등이 朝鮮社會事情研究會 회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하였다(鮮于全 [32], 白南雲 [3], 李肯鍾 [37]).

35)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朱赫 [89] 참조.

36) 〈社會實情調査所〉나 〈朝鮮社會事情研究所〉는 그러한 요구의 일환이었다. 전자는 1930년 4월 노동대중의 입장에서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좌익성향의 조사단체로서, 기관지 「이러타」와 「情報者」를 간행하였다. 후자는 1931년 유진오·최용달·俞鐵午·申南澈·李康國·朴文圭·崔容達 등 경성제대 출신의 맑스주의자들이 「朝鮮의 각 방면에 관한 충분한 資料의 수집은 정치 초미의 急任으로 정치·경제·법률·노동운동·농민운동·종교·교육·문화 등 각 부문에 관하여 실증적 통계적 조사를 하며 아울러 내외의 理論을 討究하여 그 성과를 대중 앞에 제공하고자 한다」는 취지하에 만든 연구 조사단체로서, 한국지배의 사회·경제적 필연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四方博의 「朝鮮經濟研究所」에 대항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31~1935년에 걸쳐 李如星과 金世鎔이 『數字朝鮮研究』(세광사, 전5권)을 발표하여, 한국인의 입장에서 관제 통계의 허실을 비판하였다.

1933년 6월 10일 明月館에서 27명의 발기인으로 창립된 朝鮮經濟學會는 白南雲·李如星·金洸鎮·金佑枰³⁷⁾·徐椿·李肯鍾·俞億兼·金度演³⁸⁾ 등의 산파적 노력의 결과였다. 조선경제학회의 인적 구성은 대체로 조선사회사정연구회의에서 활동했던 백남운·이순탁·유억겸 등 延專 商科의 좌·우익 교수들의 '情實關係'가 많이 작용했기에 부르주아 학문성향의 학자부터 맑스주의 학자까지 포괄될 수 있었다.³⁹⁾ 이에 따라 세간에서는 제대로 된 학술단체의 면모를 갖춘 '學術部隊의 參謀本營'로 알려졌으며, 사실상 조선경제학회는 당시 언론 학계에서 활동했던 경제연구자들을 총망라했던 조직이었다. 그러나 학회의 회원구성이 개인의 '情實關係'가 많이 작용했기에 회원간의 이념적·사상적 대립의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었다.

조선경제학회는 인적 구성이나 활동상으로 延專 商科 교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선경제학회는 창립총회에서 '經濟科學에 관한 제반연구와 조사'를 창립목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자료조사 및 모집, 토의 및 강연회 개최, 기관지 발행 및 기타 출판, 기타 본회의 상당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사업으로 결정하였다.⁴⁰⁾ 백남운이 대표간사를 맡고 있던 1934년 10월 정기총회 당시의 학회 현황을 보면,⁴¹⁾ 회원이 46명으로 늘어났으며 유억겸·이여성·김도연이 재정위원회·조사위원회·사업위원회의 常務를 각각 맡았다. 또한 同 정기총회에서 연 2차의 學報 발행, 연 5차의 통상보고회, 연 1차의 공개강연회 개최를 향후 사업계획으로 결정하였지만, 재정상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6회에 걸친 통상보고회만 이루어졌다.

朝鮮經濟學會의 활동은 학회지조차 발행하지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회원 상호간의 이념적·운동적 방향의 차이에서 연유하였다.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 진행된 민족협동전선운동이 대공황기를 거치면서 결렬되어 상호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1930년대 초반 사상학술계에도 그러한 추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朝鮮學運動'이나 震檀學會를 축으로 하는 부르주아 과학진영의 朝鮮認識과 당파성을 강조하는 맑스주의 진영의 전투적 조선관이 팽팽하게

37) 1897년 여수生으로, 중앙고보를 거쳐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The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1926)으로 콜럼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귀국 후 동아일보 조사부장·경제부장을 역임하였다.

38) 1894년 김포출신으로, 보성중학교를 거쳐 1919년 일본 慶應大學 理財學部를 졸업하였다. 1919년 2·8 독립선언운동으로 2년간 옥고를 치른 후 도미하여 1927년 콜럼비아 대학 경제학 석사학위, 1931년 아메리칸 대학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경 유학시절 俞億兼과의 친교와 뉴욕에서 같이 공부하던 崔淳周와의 인연으로 귀국 후 연전 상파에 출강하면서, 2년간 경제학과 경제학원론을 담당하였다.

39) 白南雲 [8] 참조.

40) '경제과학을 연구하는 자로서 간사회에서 추천하는 자'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었고, 회비는 연액 2원이었다. 학회운영은 간사제로 운영되었으며, 창립 총회시 7명(金佑枰·裴成龍·趙炳玉·金度演·盧東奎·韓普容·李肯鍾)의 간사가 선출되었다.

41) [63] 참조.

〈丑 1〉 朝鮮經濟學會 通常報告會 順序

제 1 회	李順鐸	세계일주와 각국의 경제상황
제 2 회	崔淳周	산업교육에 대하여
제 3 회	李如星	조선인 공업의 재문제
제 4 회	盧東奎	조선 공업의 현단계에 대하여
제 5 회	白南雲	조선사회경제학 방법론
제 6 회	李肯鍾	연쇄점 이론에 대하여

맞서 갔으며, 조선경제학회를 주도해 간 백남운은 후자의 선봉장이었다. 특히 白南雲·金洸鎭은 부르주아 경제학 일반을 비판하면서 조선경제학회의 이념을 맑스주의 경제학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⁴²⁾ 이러한 움직임은 趙炳玉·崔淳周·金度演·李肯鍾·韓普容·俞億兼 등 미국 근대 경제학의 세례를 받은 인사들이나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의 강한 거부감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써 학회를 매개로 공유된 反日·反官學의 끈은 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이념적 대립이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후 심한 재정적 곤란을 겪으면서 활동이 위축된 조선경제학회는 일제의 사상탄압이 극심해진 1937년 초반 사실상 해산하고 말았다.

이처럼 延專 및 普專 商科 교수들은 1920년 중반 이래 反日·反官學의 입장에서 학술운동에 주력하여, 일제하 지식인들에게 부여된 일정한 역사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Ⅲ. 1920~1930년대 延專·普專 商科의 경제학 연구동향

1. 맑스주의 경제학풍

1930년대 초반은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의 상대적인 증가와 대공황이라는 객관적 정세 속에서 우리 나라 '근현대 학술발흥기'라고 불릴 정도로 '朝鮮研究'의 붐과 '朝鮮學'의 열기가 고조되었다.⁴³⁾ 부르주아 과학진영과 맑스주의 과학진영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각자의 독자적인 연구성과를 내놓기 시작하였다. 물론 각각의 학술진영 내부에도 여러 조류의 연구경향과 방법론이 존재하여 반드시 단일한 학술진영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 맑스주의 과학진영에는

42) 白南雲 [5], 金洸鎭 [10] 참조.

43) 朝鮮學運動에 대해서는 방기중 [82] 참조.

크게 두 계통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코민테른-조선공산당 계열의 민족해방운동론·조선혁명론이며, 또 하나는 白南雲을 주축으로 하는 연전 상과 맑스주의 학자들의 그것이다.

전자는 일제하 맑스주의 사상운동계를 지배했던 보편적 흐름으로,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반 코민테른의 계급주의적 노선에 입각하여 민족해방·계급혁명의 내용과 성격을 도출하였다. 이 계통의 사람들은 실천운동과 관련하여 일제 강점하 조선사회의 구조적 모순 특히 농촌경제 분석에 주력하였다. 농업문제의 중요성은 조선이 농업국이고 인구의 대다수가 농민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地主制가 일제의 조선지배의 사회경제적 기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만성적인 농업공황으로 조선 농촌경제의 파탄과 지주제의 모순은 극에 달했으며, 일본인 농정가조차도 “조선의 소작제도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것”⁴⁶⁾이라 자인할 정도로 농업문제는 민족적 갈등과 대립이 엉켜 있는 최대의 사회현안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코민테른이나 조선공산당의 민족해방운동론의 기본방침이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封建的 搾取를 철폐하는 反帝反封建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으로 공식화되면서, 민족해방과 토지혁명의 유기적·통일적 결합이 강조되었다. 이들의 입론의 근거는 ‘일제에 의해 封建遺制가 보호되고 있다’거나 ‘상품화폐관계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경작관계는 대체로 前資本主義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12월테제’⁴⁵⁾의 조선사회 성격규정이었다. 따라서 이 계통 사람들의 조선사회 인식은 코민테른의 ‘12월테제’의 지침에 따라 당면한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의 사회·경제적 기초로서 제국주의에 의한 封建的 착취관계의 온존과 이로 인해 封建的 社會經濟的 關係가 지배적이라고 보았다. 말하자면 植民地半封建論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은 당면한 토지혁명(無償沒收·無償分配의 방식)의 경제적 기초를 추출, 확인하기 위해 ‘일제하 地主制의 성질과 존재형태’ = ‘半封建的 農業體制의 창출과정’⁴⁶⁾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⁴⁷⁾

44) 澤村康 [71], p. 418.

45) 1928년 12월 10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서기국에서 결정된 조선공산당 재건방침으로, 원 제목은 ‘조선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결의’이다.

46) 이 시기 대표적인 논자인 朴文圭는 半封建的 農業機構의 특질을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에 있어서 봉건적 제한 속박을 철폐함으로써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수립하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스스로가 농민의 점유권으로부터 분리를 相半하여 농촌사회의 새로운 분화를 위하여 광범한 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에 있어 자본가적 생산방법을 발달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半封建的인 영세농과 소작관계를 발달시킨 것이었다”(朴文圭 [19], p. 16.)고 규정하였다(朴文圭와 印貞植의 농업경제론에 대해서는 李秀日 [96], [98] 참조).

47) 이러한 논고로는 光宇 [17], 朴仁洙 [18], 朴文圭 [19], 朴文秉 [21], 印貞植 [22] 등이 있다.

이들의 농업경제 분석의 특징은 官學者들의 정체론과 구별되는 또 다른 의미의 조선사회에 대한 정체론적 관점에 빠지고 있다는 점으로, 서구사회와 구별되는 동양사회의 특수성, 후진성을 강조한 맑스·엥겔스의 아시아관·동양관을 조선사회를 이해하는 주요한 논리틀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조선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 그 자체에 대한 객관적 고찰이 전제되지 않은 채, 맑스주의의 아시아관을 통해 조선의 현실을 설명하려 하였으며, 그 속에서 半封建的 조선사회의 내적 조건을 확인해 갔다.⁴⁸⁾ 이는 조선후기 사회에 대한 연구가 부재했던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연유한 것이었지만, 이론 그 자체에 매몰된 이 시기 사회주의자들이 드러낸 맑스주의 이해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의 민족문제 인식은 민족 내부의 계급적 대립을 전일적으로 강조하는 계급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계급주의적 인식은 대공황기 코민테른의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론'에 입각한 사회파시즘론의 영향으로 '민족부르주아지의 개량화=타격론'으로 구체화되었다.

기본적으로 이들에 의하면 민족문제가 계급문제의 파생물이므로 계급모순의 해결에 의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스탈린의 민족이론을 교조적·기계적으로 수용하여, 파시즘의 침략적 국수주의와 민족주의자들의 주체적인 민족성·민족의식의 강조를 동일시하여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더욱이 자본주의 사멸기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民族主義는 무기력한 부르주아 이론이었으며, 이미 金融資本의 폭력적 지배체제인 파시즘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민족부르주아지의 개량화=타격론은 농촌경제 분석에서도 직접 반영되어 나타났다. 즉, 일제 자본축적의 기반으로 창출된 半封建的 지주제가 조선인 지주층과 자본가에게도 고율소작료와 높은 이윤을 보증하기에 이들은 일본 금융자본과 대립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경제적 이윤관계의 공통의 물적기반과 타협성을 가진다고

48) 朴文圭나 印貞植은 土地國有論·土地公有制에 기초한 조선 봉건사회의 正體性을 半封建的 農業機構 창출의 내적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개항 전후의 조선사회를 자급자족적 경제구조 속에서 충분한 상업자본의 발전마저 결여된 정체된 사회로 이해하였다(朴文圭 [19], p. 531, 印貞植 [22], pp. 13~30). 그런데 이러한 半封建論에 대한 개념과 분석틀은 당시 중국, 일본의 맑스주의 사상운동계에서 코민테른의 세계혁명론에 기초한 민족해방운동론이나 민주주의혁명운동 과정에서 이미 도출, 정립된 개념들이었다. 예컨대 중국의 봉건파(농촌파)와 일본공산당-강좌파의 이론이 그것인데, 특히 일본 강좌파의 일본자본주의 분석틀은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라는 현실과 관련하여 '半封建論'의 실체를 이해하는 유용한 체계였다. 일본자본주의의 기초범주로서 농업에서의 半封建的 特質을 강조한 강좌파 이론은 1930년대 조선 사회주의자 지식인 사이에서도 그 이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며, 印貞植이나 朴文圭는 그러한 일본자본주의의 특성이 조선에도 그대로 이식, 재편되었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일본자본주의의 半封建的 성격은 알제와 봉건적 제관계의 결합, 즉 봉건유제의 강한 존속을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였으며, 조선사회의 아시아적 특질과 더불어 半封建的 農業機構를 강제적으로 창출시킨 역사적 의적 조건으로 파악하였다.

규정하였다.⁴⁹⁾ 민족부르주아지의 물질 기반이 半封建的 地主制라는 점에서 노동자 농민과 대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며, 특히 대공황의 파멸적 상황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민족해방운동이나 토지혁명과정에서 이들 민족부르주아지는 협동·동맹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대상으로 설정됨으로써, 反日運動의 폭을 대단히 협소하게 만들어 갔던 것이다.

당시 맑스주의 학계에서 조선공산당-코민테른의 그와 같은 공식적 입장을 대변한 세력이 朴文圭·李康園·崔容達·鄭泰植 등 이른바 '城大그룹'으로 불리던 경성제국 대학 출신의 젊은 맑스주의 학자들이었다.⁵⁰⁾ 이들은 경성제대 관학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反官學 이념으로 맑스주의를 주목하고, 예과 및 법문학부 시절부터 경성제대 좌익교수 三宅鹿之助(재정학 담당)의 지도를 받았다. 1933년 말부터 三宅과 함께 사회주의 실천운동에도 관계하면서, '白南雲의 朝鮮認識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지식인 문화활동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⁵¹⁾

이에 비해 李順鏞·白南雲·盧東奎의 맑스주의 경제학은 朝鮮經濟史의 인식이나 民族問題 인식에서 당시 코민테른의 민족해방운동론에 입각한 朝鮮共產黨 계열의 지식인, 직업적 운동가의 그것과 일정한 차별성을 보였다. 白南雲을 비롯한 연전 상과의 맑스주의 흐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사의 체계화를 시도하려는 것이었다. 사회구성의 계기적 발전은 사적 유물론의 기본명제인 이상, 보편적 발전법칙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조선역사에서 실증, 분석함으로써 官學의 정체론이나 이 시기 맑스주의자들의 또 다른 정체론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白南雲은 방대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조선의 산업발전을 주장하던 官學의 연구방법론을 '통계의 사회성'을 무시한 '御用的 方法'으로 규정하면서,⁵²⁾ 조선사회의 내적

49) 朴文圭 [20], p. 24. 한편 印貞植는 "농촌에서 구래의 봉건적 수취관계의 존속강화의 현실이야말로 오늘날 조선에서 資本家와 地主의 경제적·정치적 제휴, 이것을 기저로 하는 半隸僕的 資本主義의 기형적 존립 발전에 二重의 물질적 협력—半隸僕的 임노동력의 제공과 축적된 봉건적 고율지대의 자본으로 공급—을 제공하는 경제적·사회적 지반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에 의거하고 있으며, 농업문제의 특수적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印貞植 [22], 「序文」, p. 1).

50) '城大그룹'에 대해서는 李秀日 [101] 참조.

51) 1933년 12월 三宅은 李載裕 그룹과 접촉하고 있던 법문학부 助手 鄭泰植의 소개로 李載裕와 수 차례 접촉. 조선공산당 재건의 노선과 방법에 대해 협의했으며, 1934년 1월 李載裕 체포, 탈출 이후 다시 鄭泰植의 소개로 프르핀테른 극동부에서 파견된 權榮台 그룹과 접촉하면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 때 鄭泰植은 權榮台 그룹의 공청책임자로서, 三宅은 문화자금부 담당으로, 그리고 崔容達·朴文圭·鄭泰植은 문화자금부 부원으로 활동하였다. 三宅과 權榮台는 몇 차례의 회합을 통해 정세 분석과 더불어 향후 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합의했는데, 그 중 지식인의 문화활동 임무로서 ① 조선의 農業問題를 철저적 근본적으로 연구할 것, ② 조선의 계신문지상에 나타난 社會民主主義 및 民族改良主義를 철저적으로 비판할 것, ③ 당시 朝鮮人間에 이상한 충동을 捲起하는 白南雲著 朝鮮社會經濟史를 철저적으로 비판할 것 등의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朝鮮總督府高等法源檢査局思想部 [69], p. 37).

52) "세간의 소위 '통계적 연구'라든지 '실증주의 연구'라는 것은 본질적 理論이 없이 통계적 수자를 행

발전을 부정한 그들의 정체론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李順鐸이나 盧東奎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李順鐸은 부르주아 경제학 체계를 조선경제사 연구에 부적합한 논리로 규정하고, '經濟學의 朝鮮的 研究'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⁵³⁾ 그가 주장한 '朝鮮的 經濟學의 研究', '經濟學의 朝鮮的 研究'는 "조선경제의 史的 發展"을 밝히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조선의 매시기의 생산력 생산관계(소유분배 관계)의 실체를 史的 方法論에 입각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⁵⁴⁾

漠然히 現實을 관찰하여 어떠한 발전단계에 속하였는지 혹은 어떠한 문화적 特殊性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며 내지 일반적 자연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다는 것은 별로 유효한 일이 아니요 現實, 즉 物質的 存在條件을 보아서 그에 적용한 어떠한 사회적 生産分配關係, 즉 經濟關係가 成立하는가 詳言하면 廣義의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는 어떠한가, 생산물의 귀속상황은 어떠한가, 계급관계는 어떠한가, 구성추이하는가 하는 등의 모든 객관적 정세를 포착하여 經濟學의 法則의 妥當性을 說明하는 것이 經濟學의 朝鮮的 研究의 현실적 방법일 것이다.⁵⁵⁾

따라서 부르주아 官學 經濟學이 의거하는 "역사주의 학파의 막연한 경제발전 단계론이나 아담 스미스류의 경제적 자연법칙을 전제로 하는 연구태도는 조선적 경제학 연구에는 不可하거나 徒勞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그런 측면에서 역사주의 학파나 고전경제학을 "해석 및 연구의 태도가 정당성을 상실"한 이론으로 간주하였다.⁵⁶⁾

盧東奎도 조선사회의 내재적 발전논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는 당연히 白南雲이나 李順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조선사회의 '史的發展論理'를 부정한 四方博의 韓國資本主義像(= '産業革命論')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四方博의 '日本資本主義'의 진출을 신비화하는 美辭'라고 일축하였다.

列로써만 과학적 衣裳을 분장하는 점에서 新興科學은 이것을 배격한다. 그러나 결코 통계를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 표준되는 통계를 동원하여서 사회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辨證할 경우에 비로소 통계의 科學性은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朝鮮을 통계적으로 표준삼아 연구한다는 것은 소위 조선의 '躍進'을 실증하려는 御用的 任務는 필지언정 現朝鮮을 인식하는 科學的 方法은 못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現朝鮮은 통계 이상의 심각한 바 있으므로"(白南雲 [6]).

53) 물론 李順鐸도 1920년대 초반기에는 독일 역사주의 학파의 대표적 이론가인 슈몰러의 경제단계설에 입각하여 福田德三流의 '封建制 缺如論' = '朝鮮社會의 停滯論'을 인정하기도 하였다(李順鐸 [1]). 그러나 이후 경제학 이론에 대한 전착과 白南雲의 영향으로 '內在的 發展論'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54) 李順鐸 [2] 참조.

55) 李順鐸, 위의 글.

56) 李順鐸, 위의 글.

朝鮮資本主義 성립과정의 연구는 해체과정에 있던 韓國末葉의 봉건경제의 本質을 규명함으로써 정당한 출발점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四方博 인용자)는 이 점에 대한 아모 논구가 없이 단순히 自足自給의 經濟社會, 後進國, 農業國 云云의 社會發展史의으로 보면 심히 불명한 용어로 표시함에 至하여서는 길게 비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⁵⁷⁾

盧東奎는 조선후기 사회가 도달한 역사적 발전단계를 무시하고 일제하에 비로소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는 四方博의 주장에 강한 반발을 표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발전논리에 입각한 한국경제사의 체계화는 “종래의 朝鮮史에 일대 청산을 畢”⁵⁸⁾한 그리고 일제하 우리 학계의 최대 성과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白南雲의 『朝鮮社會經濟史』(1933)와 『朝鮮封建社會經濟史』(1937)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백남운은 사회구성체의 계기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한국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원시 씨족공산제사회, 노예제사회(三韓에서 三國時期), 아시아적 봉건제사회(三國時期 말부터 朝鮮時期), 외래자본주의사회(日帝下)라는 4단계로 크게 설정하여, 한국사회의 보편적 역사발전 과정을 해명하고자 하였다.⁵⁹⁾ 특히 그는 조선후기 사회의 발전상을 주목하고 있었다. 1894년을 기점으로 정치·사회·경제적 분화의 촉진, 자본주의 맹아의 형성, 자유사상의 발달, 신분해방 등에 의해 봉건제사회의 해체가 더욱 촉진되고 新興 부르주아계급이 성장하는 등 일정하게 內在的 資本主義化 과정이 진전되었다고 보았다.⁶⁰⁾

또한 민족문제 인식에서도 ‘城大그룹’이나 직업적 운동가의 그것과 차이를 보였다. 白南雲·李順鐸 등은 민족내부의 계급적 대립을 전일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제국주의 지배하의 民族矛盾을 중시하였다. 李順鐸은 일제 강점하 조선사회의 모순구도를 일본인과 조선인의 대립으로 설정하여 일본자본의 지배로 조선인·조선인 경제는 총체적으로 沒落, 無產者化한다고 보았다.⁶¹⁾ 따라서 당면한 朝鮮革命은 일거에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하는 無產者의 직접적인 권력장악이 아닌 일제로부터의 민족해방=정치적 민족혁명 단계를 거쳐 사회혁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맑스의 정치혁명 개념을 민족적 정치혁명으로 代置하면서 民族協同·階級協助·左右合作 노선을 견지하였다.⁶²⁾

57) 盧東奎 [53] 참조.

58) 金洸鎮 [9] 참조.

59) 백남운의 정치경제사상에 대해서는 方基中 [82] 참조.

60) 方基中 [95], p. 258.

61) 이하 李順鐸의 정치경제 사상에 대해서는 홍성찬, 앞의 글 참조.

62) 그런 측면에서 李順鐸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상징하는 일반적 의미의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사회민주주의자’라 할 수 있다(홍성찬 [94], pp. 83~98).

白南雲은 사적 유물론의 보편법칙과 조선사회의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에서 조선민족 형성의 역사적 특성을 추구함으로써, 이 시기 계급주의적 민족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 혁명이 달성되면 민족은 해소될 것'이라는 일반적 견해와는 달리 강한 민족적 주제성을 강조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전통가치나 문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城大그룹을 비롯한 이 시기 젊은 맑스주의 지식인 운동가들과는 달리 白南雲은 오히려 조선 고유의 문화 사상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⁶³⁾

근래에 과거의 조선을 아러보려는 기운이 점차로 뚜렷하게 감도라 생긴 것은 확실히 조선인식에 관한 진보적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자랑거리로만 세우려는 것도 조선을 알라는 진실한 태도가 아닐 것이며, 이와 반대로 과거는 어찌되었든지 상관할 것이 없다 해야 파보라고도 하지 안코 심하게는 불문에 부치려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의 역사성을 부인하라는 반동적 태도로 귀착될 것이다. 그러므로吾人は 현재의 전신인 '과거'를 모조리 '발굴'해 볼 필요를 강조하는 것이니, 이것이 즉 우리의 과거를 알려는 진정한 태도일 것이며, 우리의 과거를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엄정하게 '비판'해 보아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이니, 이것이 실로 우리의 과거를 참으로 '사랑'하는 순정의 발로일 것이다.⁶⁴⁾

민족적 허무주의나 국수주의적 태도가 아닌, 과학적인 안목과 방법론을 가지고 과거 조선의 사회제도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함으로써, '민족적 생명'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다고 보았다.⁶⁵⁾

이로써 李順鐸과 白南雲은 코민테른의 階級主義的 民族觀이나 民族的 虛無主義·國粹主義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민족문제에 대한 균형적인 인식은 해방 후 '연합성민주주의론'(白南雲)이나 사회민주주의적인 중도노선(李順鐸)으로 표출되었다. 이러한 연전 상과의 맑스주의 학풍은 經濟研究會사건으로 백남운·노동규·이순탁 등이 체포되면서 뒷면으로 후퇴하고 만다.

1930년대 普專의 경우, 맑스주의 경제학자들의 활동이 활발했는데, 이들은 주로 이론경제학 방면에 치중하였다. 金洸鎭은 조선경제사에 관한 몇 면의 논고를 발표했지만, 연전의 내재적 발전론과는 달랐다. 그는 당시 맑스주의자들의 보편적 관념인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기초한 정체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 예컨대, 조선후기의

63) 또한 白南雲은 사회주의의 土着化라는 측면에서도 전통사상에 주목했는데, 茶山の 閔田論을 "공동제작 노동장부 공동저장 분배장부 등 '勞動全收權' 이론의 일단이 顯現"된 "공상적인 ××(공산-인용자)주의적 경제이론의 맹아형태"로 주목하였다(白南雲 [3]), 傳統思想과 사회주의 사상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金容燮 [79], 金聖甫 [97] 참조.

64) 白南雲 [4] 참조.

65) 白南雲의 사회사 연구에 대해서는 이준식 [92] 참조.

경제상태는 19세기 말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을 경제적 기저로 깔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상업자본마저도 내부적으로 형성할 수 없었던 아시아적 조선사회는 결국 이양선, 즉 외래자본의 침입으로 급격히 붕괴해 갔다고 보았다.⁶⁶⁾ 또한 高句麗 사회의 분석을 통해 白南雲의 노예제사회론을 비판하면서, 노예제결여론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고구려 사회에는 경제체도로서의 노예제는 존재했지만, 사회구성으로서의 노예제사회는 성립될 수 없었고, 5세기 무렵 屬民制度和 공납제를 기초로 봉건제사회로 직접 이행했다고 보았다.⁶⁷⁾

朴克采는 맑스주의 경제학의 입장에서 부르주아 경제학 체계를 비판, 검토하였다. 경도제대 『經濟論叢』에 발표한 논문에서 리카르도의 比較生産費說을 '先進 資本主義國인 英國의 自由貿易論의 辯護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짓고, '그의 비교우위론이 물화의 절대가치가 아니라 교환비례만을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를 가진다고 보았다.⁶⁸⁾ 아울러 일본 학계에서 진행된 '價値論爭'의 제설을 검토하면서 지대론과 가치법칙의 통일을 시도했으며,⁶⁹⁾ 日本資本主義論爭의 여러 쟁점을 소개하면서 講座派의 이론적 정당성을 옹호하였다.⁷⁰⁾

尹行重은 슈피도프(Spiethoff)와 하이네크(Hayek)의 景氣理論을 학설사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슈피도프의 이론은 대체로 자본주의 발달의 중기까지의 경제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며 하이네크의 이론은 1차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적 실정에 착안한 것"이라고 보았다.⁷¹⁾ 1943년 출판된 『現代經濟學의 諸問題』(世光社)는 일제 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계로 현대경제학의 주요한 흐름을 통제경제론으로 보았다. 그는 슈판(Spann)이나 고틀(Gottl)과 같은 나찌경제학자의 논리에 의거하거나 사회주의 계획경제론을 왜곡하여 간접적으로 일본 파시즘의 통제경제·블럭경제를 합리화하였지만, 한편에서는 케인즈의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을 현대 경제학의 新學說로서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였다.⁷²⁾

2. 자본주의 경제학풍

延專 商科와 普專 商科의 자본주의 경제학풍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건설의

66) 金洸鏞 [11] 참조.

67) 金洸鏞 [12] 참조.

68) 朴克采 [13] 참조.

69) 朴克采 [14] 참조.

70) 朴克采 [15] 참조.

71) 尹行重 [16] 참조.

72) 『現代經濟學의 諸問題』에 수록된 「케인즈의 經濟理論」은 원래 『夏期紙上大學 理論經濟學의 最新學說 케인즈經濟의 理論』라는 제목으로 東亞日報(1938. 8. 3~8. 7)에 연재한 글을 보강한 것이다.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으며, 反日·反官學의 측면에서 1920년대 중반~1930년대 초반 사회주의 經濟學風과 함께 朝鮮社會事情研究會·朝鮮經濟學會를 조직하여 학술운동을 전개하였다.

延專 商科의 자본주의 경제학풍은 제1차대전 후 세계 제일의 경제력을 자랑하던 미국의 近代經濟學·經營學을 토대로 형성되었다.⁷³⁾ 특히 브라운 대학 출신의 白象圭를 뒤이어 1925년 상과 교수로 부임한 趙炳玉이야말로 延專 商科에 미국 경제학풍을 도입한 주역으로, 콜럼비아 대학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통해 미국 사회과학계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그는 대학재학시 미국 최초의 이론경제학자로 알려진 클라크(J. B. Clark)⁷⁴⁾의 한계생산력설과 썬코비치(V. G. Simkhovitch)의 공산주의 비판론, 존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에 깊은 감화와 영향을 받아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내면화시켜 갔다.⁷⁵⁾ 그러한 학적 배경을 가진 趙炳玉은 일제하 해방정국기 가장 철저한 자본·민족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클라크의 한계생산력론은 한계효용학파의 한 흐름으로, 19세기 말~20세기 초반 미국 경제학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학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계효용학파는 19세기 말 이래 맑스주의 경제학의 공격으로 위기에 빠진 부르주아 경제학의 新福音으로, 노동가치설을 철저하게 배격함으로써 맑스주의 경제학의 논리적 근거를 철저히 부정하였다.⁷⁶⁾ 즉, 가치의 발생은 노동이 아니라 희소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희소성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노동가치설을 배제하고 욕망의 중요도가 재화의 주관적 가치를 발생한다는 주관적 효용성의 강조는 개인주의적 사회관과 잘 부합되기도 하였다. 클라크는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 원리를 기초로 하여 한계효용원리를 체계화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한계생산력론'을 정립하였다. 그의 학설은 자유경쟁의 원리 위에 독점 형성과 수익증가를 도모하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자본주의의 요구에 부합되는 이론이었다.⁷⁷⁾ 그 이념적 기저는 자유경쟁과 사유재산제를

73) 1920년대 재미조선인 유학생들의 학위 논문 중 경제학·경영학 계통의 논문에는 趙炳玉, 「The Career of the Theory of Competition」, 콜럼비아 대학, 1923 ; 李肯鍾, 「朝鮮內的 銀行」, 콜럼비아 대학, 1925 ; 趙炳玉, 「Land Tenure in Korea」, 콜럼비아 대학, 1925 ; 金度演, 「마-웰과 쉐더벤트의 價値論의 比較」, 콜럼비아 대학, 1926 ; 金佑柁, 「The 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 콜럼비아 대학, 1926 ; 崔淳周, 「Cable Landing Policy」, 뉴욕 대학, 1927 ; 李勳求, 「朝鮮土地法及政策史」, 위스콘신 대학, 1929 ; 崔延輯, 「朝鮮租稅史」, 콜럼비아 대학, 1929 ; 崔淳周, 「A Suggested Commercial for the Chosen Christian College of Korea」, 뉴욕 대학, 1930 ; 宋昌均, 「Social Justipication of Private Monopolies」, 남가좌 대학, 1929 등이 있다([42], pp. 198~200).

74) 클라크는 19세기 말 당시 독일 역사주의 경제학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미국 경제학풍을 이론경제학으로 전환시켜 미국적 경제이론을 창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아들 클라크도 1926년부터 콜럼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아버지와 달리 대체로 제도학파에 경도되었다.

75) 趙炳玉 [31], p. 57.

76) 주명진 [87], p. 417.

경제의 기본원리로 삼고 자본주의적 자유기업체제를 전면적으로 긍정하면서 생산력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⁷⁸⁾

趙炳玉은 이러한 한계학파의 제원칙과 쎄코비치의 공산주의 비판론 그리고 기독교의 종교윤리를 토대로 하여 특유의 反日·反맑스주의 사회경제론을 전개하였다. 그 뼈子は 원칙적으로 사유재산 제도의 정당성과 점진적인 사회개조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이었다. 그는 특정한 時代나 社會에 얽매이지 않는 한계학파의 전형적인 價値理論을 구사하면서, 개인주의적·자본주의적 사회론을 도출하였다. 그에 따르면, 경제는 “사람의 飢渴性的 動因으로 일어난 결핍을 충족하려는 방도”⁷⁹⁾로서, 경제적 물화의 회소와 인간의 욕구충족을 사회투쟁의 근본 원인으로 파악하였다.⁸⁰⁾ 제한된 자연력과 재화의 회소성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욕망·기갈성을 충족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 상호간의 경쟁으로 인해 유사 이래 사회의 소수가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대다수가 빈궁의 곤경을 당하는 것은 항상 존재해 온 불가피한 사회현상이었다.⁸¹⁾ 그런 측면에서 인류 사회의 절대적 평등은 불가능하며, 오직 점진적인 개조과정을 통해 상대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상대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과학적 발명과 개량으로 생산력을 증진해야 하며 경제적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개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⁸²⁾ 말하자면 사회적 갈등은 産兒制限이나 생활의 簡素化 등 ‘節慾’⁸³⁾을 전제로 하는 경제적 재화의 생산증가와 합리적 분배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趙炳玉은 재화의 합리적 분배, 사회제도의 개량과 관련하여 그는 급격한 ‘사회혁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였으며, 자유경쟁과 주관적 가치효용을 주장하는 그의 개인

77) 小原敬士 [86], p. 160.

78) 클라크의 대표적 저서인 『부의 분배』(*The Distribution of Wealth*, 1899)의 기본 원칙은 ① 윤리적·역사적 측면에서 사유재산 제도를 기본적인 사회제도로 승인하고, ② 개인활동의 자유는 모든 영리적인 직업에서 활발한 경쟁을 통해 작용하며, ③ 정부는 사유재산의 물리적 보호, 계약의 강제, 경쟁의 유지를 위해서만 경제분야에 개입할 수 있으며, ④ 경제활동은 사람들의 주관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⑤ 노동과 자본은 가동적 자원이며, 그 단위는 적당한 자극에 따라 경제체제내에서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고, ⑥ 사회는 생물학적 유기체에 비교될 만한 유기체이며, ⑦ 경제학의 자연법칙은 인류의 도덕 윤리의식을 전제할 경우에만 진리로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유명한 경제사회의 ‘靜態’와 ‘動態’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특히 『경제이론의 본질』(*Essentials of Economic Theory*, 1907)은 정태이론의 기초위에 경제동태의 이론을 전개한 역작이다(小原敬士 [86], pp. 146 ~ 162).

79) 趙炳玉 [23] 참조.

80) 趙炳玉 [24] 참조.

81) 趙炳玉 [26] 참조.

82) 趙炳玉 [24] 참조.

83) 趙炳玉은 節慾과 관련하여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금욕적 생활론을 매우 긍정적으로 파악하였다.

주의적 사회관⁸⁴⁾은 이 시기 대두하기 시작하던 파시즘은 물론이고 사회주의의 그것과도 원천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없었다. “혁명은 성공의 양이 만타하더라도 희생의 양이 만코 개조는 성공의 양은 적다하더라도 희생의 양은 적기”때문에, 사회는 기본적으로 평화적 수단과 자유경쟁에 기초한 점진적 사회개조를 통해 조정되어야 하며,⁸⁵⁾ 사회주의적 분배는 인간 본성뿐 아니라 基督의 精神에 기초한 道德의 心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⁸⁶⁾ 특히 그는 점진적 사회개조의 주요한 수단으로 ‘輿論(=社會精神)’과 ‘社會奉仕’를 강조했는데,⁸⁷⁾ 이는 유학시절 보고 느낀 세계 제일의 생산력·부력을 담보하는 미국적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적 빈궁의 주된 원인은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처럼 私有財產制度=所有制度의 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봉사정신이 결여된 有產階級의 무책임한 행동 및 사치생활과 그에 따른 사회생산력의 감소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사유재산제도가 성립한 것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될 뿐 아니라 경제적 생산력의 증진에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사회공헌이 없는 유산자 계급의 사치와 방종은 사유재산제도의 본위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사유재산제도는 경제적 생산력 증가에 봉사하는 사회적 공익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산자의 사치와 방종은 사회적 자본의 파멸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적 생산력 증가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빈궁의 防禦策은 “자본의 저축과 자본의 융통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고등케 함에 있다”고 하여, 건전한 자본윤리와 그에 기초한 산업활동 사회생산력의 증진을 강조하였다.⁸⁸⁾ 말하자면 趙炳玉의 經濟論은 한계효용학과의 그것에 기초한 자본주의 개량이론이었으며, 한계효용학과의 이론은 1920~1930년대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학의 한 흐름으로 자리잡아 갔다.⁸⁹⁾

84) 그런 측면에서 趙炳玉의 콜럼비아 경제학과 석사논문이 「경쟁설의 연혁적 발전」(The Career of the Theory of Competition)(1923)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는 미국유학을 통해 “개인의 완성이 국가의 목적이요, 국가는 개인완성의 조장기관에 불과하다”는 개인주의적 신념과 ‘민족의 영원 불멸성에 기초한 강렬한 민족주의’를 견지하였다(조병옥, 앞의 책, pp. 57~58).

85) 趙炳玉 [29], p. 117.

86) 趙炳玉 [30], p. 23.

87) 趙炳玉 [25], [27] 참조.

88) 趙炳玉 [26] 참조.

89) 한계효용 학설은 1932년 연건 강사로 있었던 金度演이나 朝鮮社會事情研究會·朝鮮經濟學會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李肯鍾의 기본적 입론이기도 하였다. 金度演이나 李肯鍾은 趙炳玉과 마찬가지로 모두 콜럼비아 대학 경제학과 출신이었다. 金度演은 콜럼비아 대학 석사과정 재학시 클라크의 지도를 받았으며, 신고전학과 마샬의 경제이론을 분석한 논문(「마샬 교수의 균형가격론을 분석함」)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숭회하는 논문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마샬 교수는 수요론에 있어서 한계효용이론을 전개하고 생산공급론에 있어 공급의 요인인 생산비를 분석해서 이 양자를 종합, 검토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의 가격론은 수요면에서 본 한계효용설과 공급면에서 본 생산비설을 절충한 것이다. 마샬 교수는 가격이 효용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또는 생산비에 의해

그런데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이나 자본윤리의 강조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일제하 미국유학생들의 일반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 후 미국은 '萬年繁榮'의 '팍스아메리카'라 불릴 정도로 사상 유래 없는 자본발전과 번영을 구가했으며, 세계자본주의를 이끌어 가는 기관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한 미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미국 경제학의 세례를 받은 구미유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그들의 경험과 이론을 현실의 식민지 조선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식민지 조선 사회의 현실은 모든 측면에서 자유로운 자본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제조조건을 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이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일국사적 의미의 '資本主義 自立經濟의 수립'을 회구하면서, 조선인 경제의 기초를 강화하는 資本과 技術의 축적이나 개량, 이를 뒷받침하는 '資本倫理'의 함양을 강조하였다.

自立經濟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경제학풍은 反日·反官學의 입장을 견지했으며, 그런 맥락에서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 경제학풍과 함께 反官學의 학술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일본 금융자본의 전일적 지배에 따른 '민족경제', '조선인 경제'의

서 지배되느냐 하는 것을 마치 종이 조각을 자르는 가위의 잇날이나 아랫날이나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으며 수요가격을 정함에 있어 한계효용의 이론을 전개하고 공급가격을 정함에 있어 생산비설을 설명하였다. 가위의 아랫 윗날이 이용되는 것과 같이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이 일치되었을 때 생산량은 증감이 없이 균형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균형 가격이라고 한다. 마샬 교수가 정통파와 달리 균형가격론을 제창한 것을 오지리의 멘가 교수나 영국의 제본스 교수와 같은 학파에서 재화의 가치는 일체의 인간의 욕망, 즉 주체적 평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점에서 한계효용설을 중심으로 한계효용론의 체감법칙을 절충한 것이다”(金度演 [44], p. 105).

한편 李肯鍾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933년 6월 天道敎에서는 “지식계급 당원의 전문가화와 사회 일반적으로 중등학과를 마치고 그 이상 학과를 修得할 길이 없는 처지에 있는 조선 청년에게 전문적 지식을 修得케 하기 위해” 3년 기간의 自修大學을 개설하고 동년 7월부터 학과 교재로 『自修大學講義』를 발간하였다(趙基 [70], p. 63). 이 때 李肯鍾은 경제과를 담당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도 근대경제학, 특히 한계효용학파의 견해를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였다(李肯鍾 [34], pp. 1~58). 목차는 다음과 같다.

緒論

- 一. 經濟及經濟學의 意義
- 二. 經濟生活의 歷史性과 非歷史性

第一編 價値及價格論

- 第一章 慾望
- 第二章 財貨
- 第三章 效用及價値
- 第四章 價格

第二編 生産論

- 第一章 生産의 意義
- 第二章 企業
- 第三章 生産資料

총체적 몰락은 자립경제 수립의 최대의 난관이었다. 崔淳周는 강점 이래 조선의 무역 실태를 간략하게 고찰하면서 조선무역액의 증가를 지표로 조선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주장했던 조선총독부의 대대적인 선전이나 官學者들의 견해를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朝鮮産業의 '비약적 발전'을 흔히 무역증가로써 표명한다. 사실상 수자로 보면 12배 이상 증가된 異論이 없다.……무역액의 12배 이상 비약적 증가에 물가와 인구의 증가를 넣어 검토하면 오직 3~4배 증가에 불과하다.……물론 무역증가가 생산발전 여하를 표명하는 한 방도는 된다. 그러나 산업 발전 소장을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니다.……우리 조선무역은 조선인 경제 消長을 표명키 어렵다. 근년에 이출액이 많아짐은 米의 일인당 소비량을 감소시키면서도 이출을 격증시키요. 수입의 증가는 대체 滿洲粟 소비의 증가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조선무역 증가를 통계적 수자만 보고 물가변동 인구증가 수출입품 종류를 고찰치 않고 산업발달을 표현한다면은 실로 무의미한 바이다.⁹⁰⁾

말하자면 “식민지에서 현대적 산업을 보았다하지라도 植民地大衆의 窮乏의 促進에 있어서만 가능한 것”⁹¹⁾으로, 애초부터 ‘식민지 경제발전’이란 제국주의 수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일제하 ‘朝鮮經濟의 發展’이란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日本人經濟의 발전이며, 조선인 경제는 소수의 조선인 유산자마저 무산화되어 가는 파멸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았다.⁹²⁾ 조선인 경제의 파멸은 분배상에 나타나는 민족적 불평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일본인=통치자=유산자’와 ‘조선인=피통치자=무산자’라는 민족적 대립·갈등의 직접적인 반영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 경제의 문제는 일본인 경제와 조선인 경제 사이의 분배문제로 수렴되지만, 현금 일본인 위주의 정치 법률제도하에서는 민족적 분배정의란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보았다. 분배의 민족적 불균등을 해결하려는 경제투쟁은 필연적으로 民族運動으로 전환된다고 보았다.⁹³⁾

普專 商科에 오랫동안 강사로 출강했던 李寬求는 조선인 경제의 몰락⁹⁴⁾과 민족운동과의 관계에 대해 일본자본에 대항하는 민족적 단결을 주장하였다.

90) 崔淳周 [50], p. 28.

91) 洪性夏 [45], p. 52. 洪性夏는 “현대의 모든 모순과 대립은 자본주의발전의 최후단계인 제국주의금융자본의 내재적 모순에 있다”는 帝國主義論에 입각하여 일본 금융자본의 전일적 지배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洪性夏 [46], [47], [48], [49] 참조).

92) 趙炳玉 [28]. 한편 李肯鍾은 일본자본의 전일적 지배와 조선인 경제의 몰락상을 숫자 통계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李肯鍾 [33]).

93) 趙炳玉 [28] 참조.

94) 李寬求, “農村經濟沒落의 片影”, 『現代評論』, 6, 1927. 7.

이와갓치 조선의 경제상태는 점점 쇠퇴하여 간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에 조선사람으로서의 소위 자본가나 지주계급들은 날로 몰락하여 간다. 그럼으로 저희들의 經濟上 獨立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저희들 자체의 團結과 合同으로 相扶相濟해야 다른 大資本家에게 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어늘 저희들이 이 방면을 소홀히 하고 도리혀 자기보다 弱한 무산계급을 일층 더 착취함으로 延命을 꾀하는 것은 이보다 더 무모한 바는 없다. 그리하여 혹은 고리대금으로나 혹은 소작농민에 대한 가혹한 소작계약으로나 음모와 사기를 꾀하는 것은 더욱이 조선의 경제계의 파멸의 경향을 激成함에 功치고 만다. 功세인 배경을 갖추어 가진 다른 大資本家들에게 압박되어 弱者로서의 悲哀는 저희들이나 무산계급이나 정도의 차는 잇슬지언정 그 實은 한가지다.⁹⁵⁾

이에 李寬求는 일본자본에 대항하는 조선인 유산자와 무산자와의 '共同戰線'을 주장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계급대립보다는 일본 자본과의 계급적·민족적 대립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조선인 경제의 몰락과 그 타개책으로서의 민족공동전선의 확립은 延專 및 普專 상과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던 조선사회사정연구회·신간회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런데 自立經濟 확립의 선결조건이 일제나 일본자본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었지만, 이는 장기적인 민족해방운동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조선인 경제의 현실적 자구책으로 조선인 실업가들의 건전한 자본운리의 함양이나 전문기술자 기업가의 양성, 기업활동의 확대 등 조선인 실업계의 진흥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미국 경제학풍을 체득한 이들의 일반적 경향이었으며, 연전 상과의 자본주의 학풍은 이를 가장 반영하였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사회주의 경제학이 '生産'보다는 '分配'를 더 중시했던 것에 비해 자본주의 경제학은 '分配'보다는 '生産'에 더 관심을 두었으며, 또한 세계자본주의를 리더해 가는 미국의 經濟學·經營學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자본생산력의 극대화'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 유학출신의 경제연구자들은 대체로 조선사회의 계급문제나 민족문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보다는 실무적인 상업기술이나 경영관리에 깊은 관심을 표방하면서 상업교육의 방면이나 실업활동에 치중하였다.⁹⁶⁾ 실제로 한계효용론과 같은 정상적인 일국사의 자본주의 체제에 부합되는 근대경제학 이론으로 식민지 조선경제의 모순구조와 계급적·민족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95) 誠齋(李寬求) [40], p. 75.

96) 예컨대 金度演(조선총업주식회사 전무)·崔淳周(조선총업주식회사 사장)·李肯鍾(화신백화점 과장)·韓普容(화신상점 과장)·조병옥(광산경영) 등이 실제 실업활동을 했으며, 실업활동과 관련하여 마케팅이나 회사 상점경영에 관한 글(崔淳周 [51], 李肯鍾 [38], [39])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작업은 사회주의 경제학의 그것에 비해 기본적인 한계를 내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들의 학문적 성과는 사회주의 경제학의 그것에 비해 빈약하지 않을 수 없었다.⁹⁷⁾

延專 商科의 자본주의 학풍에 갈려 있는 미국의 商學·經營學의 흐름은 이 시기 조선인 '實業·産業振興論'의 차원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조선 최초의 상학박사로 알려진 崔淳周는 실무적 상학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연전 상과의 교과목도 보다 실무·실용 위주로 개편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⁹⁸⁾ 金度演의 경우 1차대전 후 미국의 산업계에 흥미하던 산업합리화 정책의 골자인 '과학적 경영방법'(Scientific Management-테일러 방식)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과학적 경영법이 추구하는 생산의 효율성, 합리적 경영관리의 정신을 조선 산업개발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⁹⁹⁾ 현금 조선경제의 핵심은 보잘것 없는 조선인 경제의 분배문제가 아니라 생산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 방면에서의 기업과 건전한 자본주의 윤리를 가진 기업가·경영가의 활동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기업활동의 방향은 "개인의 이익을 주안삼지 말고 사회적으로 부를 증가하며 민족공통의 행복을 위하여 근본적 기초를 삼아야 한다"¹⁰⁰⁾는 것으로 건전한 자본윤리에 입각한 자립경제수립이었다.¹⁰¹⁾

그런데 1930년대 초반 대공황기를 전후한 시기의 조선인 경제연구자들 사이에는 과학적 경영법등 전후 資本主義 諸國에서 실시된 '산업합리화 정책'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사회주의자들의 경우, 산업합리화 정책을 1차대전 후 체제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의 상대적 안정화 정책'으로 파악하였다.

97) 그런 맥락에서 미국유학생은 당시 세간에 '무식하고 실력없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白樂濤 [74], p. 51).

98) 홍성찬 [93], p. 274.

99) 金度演 [43], pp. 99 ~ 101.

100) 金度演 [43], p. 101. 한편 金度演은 자립경제의 수립문제와 관련하여 아메리카 대학 경제학 박사학위 논문 「Rural Economic Conditions in Korea」(1931)에서 농업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논문의 주제는 세계대공황의 여파속에 파탄일로에 직면하고 있는 조선농촌의 부흥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당시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특히 YMCA 등 기독교 사회운동가들)이 많이 제기했던 덴마크 농촌협동조합운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가 숭회하는 논문의 대강은 일제 강점하 농촌의 실정을 외국의 그것과 비교하고, 농업협동조합이 잘 발달되어 있는 덴마크와 독일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협동조합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한국적 협동조합으로 '契'에 주목하였다. 농촌의 상호부조 조직인 계를 개량하면 능히 협동조합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다각적 농업과 유축농업을 병행한다면 충분히 농촌경제의 향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강점 후 동척 등 일본자본의 토지수탈과 일본인의 농업이민, 그리고 가혹한 소작제도로 인해 조선농민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일제가 선전하는 농촌생활의 향상은 허위임을 강조하였다(金度演 [44], p. 116).

101) 李肯鍾도 산업진흥의 방책으로 大資本의 필요와 육성, 有爲한 企業家와 전문지식을 갖춘 技術者의 양성, 자연 및 사회적 요소에 應한 適宜한 생산산업의 장려 등을 제시하였다(李肯鍾 [35]).

대개 資本主義 諸國이 産業合理化를 채용하게 된 이유는 생산비를 低減하여 기업가의 利潤을 증진하자는데 있으며 국내에서 전부 판매할 수 없는 과잉상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능력을 강대히하여 해외시장을 정복하자는데 있다. 그리고 그 근본적 사명은 1924년 이후 大戰 전부터도 몇 배나 더 강하게 나타난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 — 즉, 자본가의 이윤이 증대할수록 그 반비례로 대중의 소비력은 축소하여 자본주의조직하에서는 자본가가 日益 다량생산하는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 — 에 대한 一對策이다.¹⁰²⁾

즉, 産業合理化를 세계대전으로 인한 생산력 파괴와 전후 공황으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위기의 타개수단으로 특히 국가권력의 매개로 의식적·조직적으로 수행된 금융독점자본의 대대적인 '資本攻勢'로서 규정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테일러 방식이나 포드시스템과 같은 신기술의 채용과 노동력의 재조직화를 골자로 하는 생산과정의 합리화를 노동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한다는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실업자를 대량으로 증대시키는 '資本主義 固有의 惡'으로 이해하였다.¹⁰³⁾

결국 전후 歐美諸國의 경쟁적인 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세계자본주의는 국내외시장의 축소, 고정적 실업, 관세전쟁, 노동력 착취도의 강화 등 이른바 자본주의의 제3기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1929년 대공황은 이를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이며, 공황기의 자본주의적 제대책은 무용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¹⁰⁴⁾ 따라서 이들에게 산업합리화 내지 그 정신을 원용한 '조선경제의 組織化'는 고려될 여지가 없었다.

이 같은 인식과는 달리 이 시기 자립경제론에 입각한 경제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민족주의 계열은 金度演의 주장처럼 산업합리화 정책과 정신을 조선인 경제의 부흥, 자립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산업합리화 정책 속에 담겨져 있는 계급적 본질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의 추구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테일러 방식이나 포드 시스템에 기초한 산업합리화는 가혹한 '노동착취'에 기초한 독점자본의 탐욕스런 정

102) 盧東奎 [52], pp. 9 ~ 10.

103) 盧東奎는 "산업합리화의 본질을 엄폐하기 위하여 산업합리화가 국민의 생활을 지배하는 신기한 묘책과 같이 선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중은 경제조직 정리의 결과 다수의 실업자가 거리에 방황하고 있음으로 산업합리화를 하여 수출만 증대되면 그들의 생활을 즉시 회복될 듯이 인정하여 이에 찬성하였다. 그러므로 산업합리화는 노자일치로 가위 거국일치의 운동이 되었다"고 하여, 산업합리화 정책을 파시즘과 통제경제의 대두와 밀접한 관련을 지우고 있다(盧東奎 [52], p. 7).

104) "각국의 産業合理化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급속히 고도화하였으며, 합리화의 결과는 생산장치가 격증하였으므로 대량생산과 대량판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어서 국내 및 국외 시장의 협소화로 인하여 생산장치를 충분히 운전하지 못하고 대체로 생산능력의 5~6할밖에 이용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합리화는 공황을 극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공황을 연장시키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다"(白南雲 [99]).

책이 아니라, 경제활동에서 '불합리한 규율과 제도를 혁신하여 濫費를 배제하고 과학적 신지식과 최신 기술을 채용하여 생산의 능률을 도모하자는 합리적인 운동'으로 간주되었다.¹⁰⁵⁾ 말하자면 산업합리화는 자본의 이성적 발전의 결과물이었다. 물론 金度演은 산업합리화 정책의 부분적인 문제점이나 그에 따른 노동자의 비난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향후 산업합리화 정책의 골자인 과학적 경영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였다. 이는 과학적 경영법이 제창된 본래의 정신에도 부합된다고 보았다. 즉, 생산력 증대는 “資本主義의 私腹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오 전사회에 일반 생활 정도를 풍유하게 하는 것”으로, “현금 산업계의 難問題인 勞資의 충돌, 불평등적 분배를 해결하는 활로”가 될 것으로 보았다.¹⁰⁶⁾ 이처럼 산업합리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는 科學의 原理를 產業界에 적용하여 끊임없는 생산력 발전을 추구하는 '資本主義의 창조적 힘'에 대한 깊은 믿음과 확신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 산업계의 비약적 발전이 이 사실을 웅변해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산업합리화의 정신과 이념은 '朝鮮人 經濟의 組織化'로 수렴되었다. 그 조직화의 방향은 조선인 자본과 노력의 조직화·협동화,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 내지 협동정신의 함양이었다. 기독교 계열의 대표적 농업이론가로서 덴마크식 농업협동조합운동을 모델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했던 洪秉璇은 세계 산업계의 대세를 '자본과 노력의 조직화'와 '협동정신의 함양'¹⁰⁷⁾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불문하고 추진되고 있는 산업합리화의 구체적 방향·정신으로 간주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조선인 경제의 조직화는 '物質運動'인 동시에 '精神運動'이었으며, 이를 통해 자립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시기 자립경제의 길을 모색하고 있던 물산장려운동 계열의 인사들도 “이 무서운 경제공황! 즉 살인적 금융공황! 전적으로 협동을 하자 이 전적 협동의 실현여부는 곧 우리의 전도안위를 점치는 것”¹⁰⁸⁾이라고 절규하면서, 패전독일과 경제상황이 유사한 조선인 경제계에서도 하루빨리 산업합리화의 실시를 강조하였다.

105) 金度演 [43], p. 98.

106) 金度演 [43], p. 100.

107) “금일 세계의 산업에 머릿짓하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노력을 一毫라도 소비치 않고, 최선의 방법으로 조직하여 사용함으로써 최대의 생산을 하게 된 것이다.……저 미국이 산업에 으뜸 된다 함은 그 나라에 부원이 많은 것뿐 아니라 인재와 과학적 원리를 잘 이용한 까닭이라 하겠다. 모든 노력을 조직화하려면 협동적 정신이 있어 무엇이든지 협동하여야 할 것이다. 금일 세계산업계는 자본주의 계통과 사회주의 계통이 있는데 세계의 산업을 자본주의 계통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자본의 조직화 다시 말하면 자본의 단결·단합이 너무도 단단하고 강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까닭이다. 주의를 불구하고 이와 같이 努力을 합하여 사용하여야 능히 산업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洪秉璇 [100], p. 692).

108) [68] 참조.

이 운동(=산업합리화운동)이 조선현재 사정으로 보아 용이히 실현될 듯하면서도 잘 실현되지 않은 것은 何故일가? 주요 원인으로서는 相互協助精神의 결핍이로이다. 즉, 이해관계의 相異에 의한 이기주의적 충돌이다. 자기일신 일가의 번영을 위하여는 타인의 패망을 희망하는 이기주의적 사상을 산업계 전반이 부진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도 극복하지 않고 抱持하고 있는 연고이다. 그리하여 일반 생산자가 불경기를 만회하려고 합리화운동을 할 때 자신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타인은 낭패를 하든지 망하든지 나혼자나 잘되어 보자' 하고 이기적 반동을 하는 것이다.…… 산업합리화운동 그것이 산업계 전반에 대한 운동인바 이 운동에 이기적 비열한 심리, 공동적 행동에 배반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장애가 되는 것이요 타인으로 보아 前日에 少利만 알고 장래의 대망을 몰각하는 愚劣無知한 행위인 것이다. 공동적으로 협조할 일에 있어서는 자진하여 협조치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배반적 행위를 하면 공동협동의 파괴는 물론이고 자신 및 기타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인간의 생활이란 사회적이며 유기적인만큼 결코 고립적 존립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고 비인간적 비열한 야심으로 산업합리화운동을 파괴하는 무지한 것을 말고 인간적 양심으로 합리화운동에 장래의 대망을 기대하며 조선산업의 발달과 융성을 도모할 것이다.¹⁰⁹⁾

산업합리화의 전제는 자본의 협동화를 의미하며, 그 전제로 협동사상의 함양, 나아가서 건전한 '자본윤리', '산업도덕'의 수립이었다.¹¹⁰⁾ 결국 이 계통의 논자들의 産業合理化論은 조선인 중소자본을 조직화 협동화할 수 있는 건전한 자본윤리, 산업도덕의 육성을 통해 일제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체를 결성해 가는 것이었다. 이처럼 대공황기 전후 민족주의 계열의 경제운동론에서 보여지는 '産業合理化論'은 延專商科의 자본주의 경제학풍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趙炳玉·金度演·崔淳周 등은 정치계·실업계·교육계 등에서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¹¹¹⁾

109) 雪友學人 [55], pp. 7~8.

110) 宋潤齋 [56]. 한편 미국의 산업합리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조선인 경제의 향후 방향을 전망한 韓昇寅(시카고 대학 출신)도 "요컨대 현재 우리 나라의 엇든 산업을 물론하고 그 구계책을 강구하려면 저 실업가들이 私利를 제2조건으로 삼고 동일 계급 또는 사회전체의 공익을 선결문제로 생각하여 일심 제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기업가의 자본윤리를 강조하였다(韓昇寅 [57], p. 58). 또한 그는 일반적 불경기에 따른 대중의 구매력 감소, 원시적 경영법에 의존하는 상인의 無能, 자금결핍을 조선 산업이 부진한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4M(사람·상품·자금·관리)의 調和·宣傳·協同工作을 '사업진 흥책'으로 제시하였다(韓昇寅 [58], pp. 191~196).

111) 趙炳玉은 신간회와 흥사단·YMCA운동에 정력적으로 참가하면서, 민족해방운동과 사회복음주의를 결합시켜 갔다. 특히 연전 교수시절 李昇薰, 鄭仁果, 韓稚振 등 당시 조선기독교 각파의 중진들과 함께 '사회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민족화'의 가치를 내건 基督信友會를 조직하고 7명의 理事중 한 사람으로 활동하면서, 기독교혁신운동을 주장하였다. 일제는 基督信友會를 '기독교계 민족주의자들의 전위', '각파 협동전선'으로 간주하여 정치적 사찰을 했는데, 연전 학생들이 다수 관련된 기독교신우회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趙炳玉 [31], pp. 98~99 : 「基督信友會 宣言」, 基督申報, 1929. 6. 12). 한편

한편 일제 말기 연전 상과의 자본주의 학풍에서 주목되는 점은 케인즈 경제학의 수용이다. 1938년 經濟研究會 사건으로 연전 상과의 맑스주의 학풍이 일제에 의해 괴멸되자, 申泰煥·陸芝修(동경제대 경제학과, 경성제대 예과 강사)·高秉國(동경제대 법학과)이 맑스주의 경제학이 후퇴한 延專 商科의 공백을 메웠다. 특히 1939년 東京 商大를 졸업하고 곧바로 연전 상과 교수로 부임한 申泰煥은 케인즈의 소득분석 중심의 경제학을 강의함으로써,¹¹²⁾ 普專 商科의 尹行重과 더불어 케인즈 경제학의 도입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학계에서 케인즈 經濟學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시기는 1938년을 전후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케인즈 경제학은 해방 후 미국 경제학의 본격적인 유입과 더불어 한국 경제학계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아 갔다.

IV. 맺음말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인 서구 경제학의 연구와 현실분석은 192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무렵부터 미국이나 일본유학을 통해 서구 경제학의 체계적인 학적 기반을 갖춘 연구인력이 미미하지만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經濟學 및 商學教育이 일본인 교수 일색인 官立의 京城帝大나 京城高商 아니면 私立의 延專이나 普專에서 이루어졌던 현실 속에서 이들의 학계진출이나 전문적 연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대부분의 경제학 전공자들이 언론·문화·실업 활동에 종사하면서 경제학 연구를 겸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延專과 普專의 경제학풍은 일제하 열악한 韓國 經濟學界의 방향을 주도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經濟學이 현실 사회경제의 지반 위에 성립, 발전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일

김도연은 연전 상과에 출강시 정인보, 이순탁, 성낙서, 이회승 등 당시 연전 및 이화여전 교수들과 더불어 '우리 민족 자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도모할 목적'으로 무명의 연구단체를 만들기도 하였다(金度演 [44], 「序文(李熙昇)」, p. 5). 그 후 金度演은 2년 동안의 연전 상과 생활을 청산하고, 실업계에 투신하였다. 金重賢이 경영하던 조선제사주식회사의 감사를 2년간 역임하다가, 1930년대 중반 미국 유학생들을 발기인으로 하는 자본금 30만 원의 朝鮮興業株式會社를 설립하였다. 崔淳周, 金良洙, 俞億兼, 徐珉濂, 申允局 등이 취재역을 맡고, 金度演이 전무役に 취임하였다. 이 회사는 산업진흥개발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주로 토지매매·개간, 임야채벌, 광산업에 주력하였다. 특기할 점은 이 회사의 중역들은 수양동우회나 흥업구락부에 관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조선어학회에 일정한 자금도 회사하였다. 그런 관계로 일제는 이 회사를 일종의 항일클럽으로 감시했으며, 실제로 수양동우회 사건이나 흥업구락부 사건, 그리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金度演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옥고를 치렀다. 조선어학회사건 이후 崔淳周가 사장으로 회사경영을 전담하다가, 해방 후 대부분의 회시간부들이 정치계에 투신함에 따라 제3자가 회사를 인수하였다(金度演 [44], pp. 126 ~ 138).

112) 申泰煥 [73], p. 34.

제하 한국인의 경제연구는 일제와 일제 침략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학문에 반대하는 反日·反官學의 입장에서 추구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反日·反官學의 경제 학풍은 민족해방과 국가건설의 구체적 방법과 지향에 따라 사상적·이론적 틀을 달리 하였다. 이는 이 시기 民族主義와 社會主義로 분화되기 시작한 조선 사상운동계의 동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성향의 자본주의 경제학과 맑스주의 경제학으로 분화되어 일제하 해방정국기에 걸쳐 공존·대립하였다.

이러한 분화는 延專이나 普專의 경제학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미션학교인 延專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와 미국적 자유민주주의의 분위기가 깊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연전 商科학풍의 한 축은 그것에 기초하게 되었다. 趙炳玉·崔淳周 등 미국 유학생 출신 경제학자들이 자연스럽게 대거 포진함으로써, 延專 商科는 미국의 근대경제학·경영학의 輸入地라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전문적 연구활동에 종사하기보다 미국의 실무적·기술적 성향의 학문보급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미국적 경제학 풍토와 더불어 延專 商科에는 李順鐸·白南雲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학풍이 건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세계공황과 파시즘의 대두라는 시대적 조류와 더불어 이들의 학풍이 연전 상과 전체를 압도했을 뿐 아니라, 1930년대 조선 학계를 주도해 갔다. 普專의 경우도 비슷했는데, 洪性夏·李寬求 등 자본주의 경제학자와 金洸鑣·朴克采·尹行重 등 신진의 맑스주의 경제학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처럼 延專 商科와 普專 商科의 학풍은 자본주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으로 분화되어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현실에 대한 객관적 파악과 그에 기초한 민족해방의 전망이라는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사회·학술 운동에서 긴밀한 협동체제를 이루어 갔다. 그러한 움직임의 소산이 1920년대 중반의 朝鮮社會事情研究會, 1930년대 초반 朝鮮經濟研究會라는 反日·反官學의 이념을 표방한 학술운동체의 조직으로 나타났으며, 연전 및 보전의 상과 교수들은 이 같은 학술운동을 통해 일제하 지식인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는 1930년대 초반 학술사상계 내부에서 민족문제나 계급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일어남에 따라 끊어지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후 1930년대 한국 경제학계의 흐름은 사회주의 경제학풍이 사실상 주도권을 장악해 갔다.

1930년대 한국 경제학계는 사회주의 경제학의 시대라 할 정도로 이 계통의 한국경제사나 현실문제에 관련된 논고와 저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 시기 맑스주의 경제학 학계에는 두 계통의 인식이 존재했는데, 하나는 코민테른-조선공산당 계열의 민족해방운동론·조선혁명론이며, 또 하나는 白南雲을 주축으로 하는 연전 상과 맑스주의 학자들의 그것이다. 전자는 일제하 맑스주의 사상운동계를 지배했던 보편적 흐름으로,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반 코민테른의 계급주의적 노선에 입각하여 민족해

방·계급혁명의 내용과 성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조선사회 인식상의 특징은 官學者들의 정체론과 구별되는 또 다른 의미의 조선사회에 대한 정체론적 관점에 빠지고 있다는 점으로, 서구 사회와 구별되는 동양사회의 특수성과 후진성을 강조한 맑스·엥겔스의 아시아관·동양관을 조선사회를 이해하는 주요한 논리틀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민족문제 인식에서도 민족 내부의 계급적 대립을 전일적으로 강조하는 계급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비해 李順鐸·白南雲의 맑스주의 경제학은 조선경제사의 인식이나 민족문제 인식에서 당시 코민테른의 민족해방운동론에 입각한 朝鮮共產黨 계열의 지식인 직업적 운동가의 그것과 일정한 차별성을 보였다. 白南雲을 비롯한 연전 상과의 맑스주의 흐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사의 체계화를 시도하려는 것이었다. 보편적 발전법칙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조선역사에서 실증·분석함으로써 官學의 정체론이나 이 시기 맑스주의자들의 또 다른 정체론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민족문제 인식에서도 민족내부의 계급적 대립을 전일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民族矛盾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거나 강한 민족적 주체성을 보였다.

한편 延專 商科와 普專 商科의 자본주의 경제학풍은 자본주의 국가건설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특히 趙炳玉·崔淳周·金度演 등이 주도한 延專 商科의 자본주의 경제학풍은 당시 세계자본주의를 이끌어 갔던 미국의 近代經濟學·經營學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에 공감하고 이를 新國家建設의 모델로 설정하였다. 경제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은 한계효용학파에 토대를 두었으며, 1930년대 후반에 케인즈 경제학이 소개될 때까지 당시 자본주의 경제학계의 지배적인 경제이론으로 군림하였다. 이들은 官學 經濟學의 '植民地 資本主義論'을 정면에서 부정하면서 '資本主義 自立經濟'의 수립을 회구하였다. 自立經濟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反日·反官學의 입장을 견지했으며, 그런 측면에서 사회주의 학풍과 연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일본 자본에 대항하는 조선인 유산자와 무산자와의 '共同戰線'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自立經濟 확립의 선결조건이 일제나 일본자본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었지만, 이는 장기적인 민족해방운동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조선인 경제의 현실적 자구책으로 조선인 실업가들의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의 배양이나 전문기술자·기업가의 양성 등 자본주의 경제윤리나 과학적 경영관리를 주장하였다. 말하자면 조선인 자본을 조직화·협동화할 수 있는 건전한 자본윤리, 산업도덕의 육성을 통해 일제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체를 결성해가는 것으로, 이는 대공황기 전후 민족주의 계열에서 전개하고 있던 경제운동론과 맥락을 같이하였다.

이처럼 延專 商科의 자본주의 경제학풍과 사회주의 경제학풍은 일제하 조선 경제

학계의 두 흐름을 대표했으며, 각각 자본·민족주의 진영의 국가건설론과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건설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몇 차례의 민족협동전선의 모색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의 정치적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두 흐름의 경제학풍은 민족분단의 현실 속에서 남·북한의 體制理論으로 전화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1. 李順鐸, “朝鮮의 經濟組織”, 「時代日報」, 1924. 4. 2.
2. _____, “特殊事情에 鑑한 經濟學的 朝鮮的 研究論”, 「朝鮮日報」, 1935. 7. 8.
3. 白南雲, “朝鮮 契에 對한 社會史的 考察”, 「現代評論」, 1-6·7, 1927. 7. 8.
4. _____, “朝鮮特有的 社會制度”, 「東亞日報」, 1934. 10. 20.
5. _____, “理論經濟學的 再建”, 「中央」, 2-10, 1934. 10.
6. _____, “‘數字朝鮮研究’ 제5집에 대한 독후감”, 「동아일보」, 1935. 5. 28.
7. _____, “丁茶山의 思想”, 「東亞日報」, 1935. 7. 6.
8. _____, “學術基幹部隊의 創設 — 中央아카데미創設”, 「東亞日報」, 1936. 1. 1.
9. 金洸鎮, “白南雲의 著書 ‘朝鮮社會經濟史’”, 「東亞日報」, 1933. 9. 21.
10. _____, “科學의 黨派性 = 歷史性”, 「青年朝鮮」, 1, 1934. 10.
11. _____, “李朝後期에 於ける 朝鮮의 貨幣”, 「普專學會論集」, 1, 1934.
12. _____, “高句麗의 生産樣式 — 國家의 形成過程을 中心として”, 「普專學會論集」, 3, 1937.
13. 朴克采, “リカルドオ의 比較生産費說について”, 「經濟論叢」, 38-5, 1934. 5.
14. _____, “地代論と 價値法則”, 「普專學會論集」, 2, 1935.
15. _____, “講座派와 舊勞農派의 對立(全12回)”, 「東亞日報」, 1936. 1. 31~2. 18.
16. 尹行重, “景氣理論에 於ける 슈비트イホフ와 하이엑”, 「經濟論叢」, 40-3, 1936. 3.
17. 光宇, “朝鮮의 土地問題와 共產黨의 土地綱領”, 「階級鬭爭」, 3, 1930. 1.
18. 朴仁洙, “封建遺制와 金融資本과의 野合”, 「新興」, 4, 1931. 1.
19. 朴文圭, “農村社會分化의 起點としての 土地調査事業에 就て”, 「朝鮮社會經濟史研究」.
20. _____, “朝鮮農業機構의 統計的 解說”, 「新興」, 8, 1935. 5.
21. _____, “農業朝鮮의 檢討”, 「朝鮮中央日報」, 1936. 6. 9~7. 28.
22. 印貞植, 『朝鮮의 農業機構分析』, 白揚社, 1937.
23. 趙炳玉, “文明的 經濟的 基礎”, 「時代日報」, 1925. 11. 2.
24. _____, “社會的 鬭爭의 經濟的 基礎 및 그 救濟策”, 「朝鮮日報」, 1926. 1. 1.

25. _____, “社會的 奉仕의 經濟的 意義”, 「東亞日報」, 1926. 1. 1.
26. _____, “有產者의 責任”, 「時代日報」, 1926. 1. 2.
27. _____, “社會精神의 性質”, 「延禧」, 6. 1926. 5
28. _____, “經濟問題의 一觀”, 「東亞日報」, 1927. 1. 16~1. 18.
29. _____, “宗教家도 革命家가 될수잇슬가”, 「青年」, 7-2. 1927. 3.
30. _____, “十字架의 武士”, 「青年」, 8-3. 1928. 3.
31. _____, 『나의 回顧錄』, 도서출판 해동, 1986.
32. 鮮于全, “朝鮮鐵道交通의 發達及將來”, 「現代評論」, 1-6. 1927. 7.
33. 李肯鍾, “朝鮮人經濟의 數字的 概觀”, 「現代評論」, 1. 1927. 1.
34. _____, “自修大學講義經濟科”, 『自修大學講義』, 景仁文化社 影印, 1972.
35. _____, “產業振興의 要素”, 「朝鮮講壇」, 1-1. 1929. 9.
36. _____, “朝鮮人經濟의 數字的 概觀”, 「現代評論」, 1. 1927. 1
37. _____, “朝鮮의 金融制度”, 「現代評論」, 1-7. 1927. 8.
38. _____, “雜貨市勢엔 暴騰이 온다”, 「三千里」, 1935. 11.
39. _____, “一流商家의 致富秘訣 一宣傳費는 賣上高의 六分標準”, 「三千里」, 1935. 12.
40. 誠齋(李寬求), “中間階級考”, 「現代評論」, 2. 1927. 3.
41. 李寬求, “農村經濟沒落의 片影”, 「現代評論」, 6. 1927. 7.
42. “北美留學生博學士論文題一覽”, 「우라키」, 留美學生會十周年記念特大號, 1930. 6.
43. 金度演, “產業의 科學的 經營에 對한 考察”, 「우라키」, 1. 1925.
44. _____, 『나의 人生白書』, 康友出版社, 1968.
45. 洪性夏, “朝鮮工業의 現階段”, 「別乾坤」, 34. 1930. 11.
46. _____, “朝鮮工業의 現階段(續)”, 「別乾坤」, 35. 1930. 12.
47. _____, “外來資本總觀 — 三井王國과 朝鮮”, 「三千里」, 3-1. 1931. 1.
48. _____, “三井財閥의 進出”, 「三千里」, 3-7. 1931. 7.
49. _____, “朝鮮과 大資本의 活躍”, 「東光」, 29. 1932. 1.
50. 崔淳周, “朝鮮貿易增加는 얼마나되엇는가”, 「延禧」, 8. 1931. 12.
51. _____, “販賣員의 訓練을 어떻게 할까?”, 「新東亞」, 5-6. 1935. 6.
52. 盧東奎, “產業合理化序說”, 「延禧」, 7. 1931. 1.
53. _____, “城大法文學會 發刊 ‘朝鮮社會經濟史研究’ 論集을 讀함(上)”, 「東亞日報」, 1934. 3. 7.
54. 盧東奎, “統制強化의 新組織 — 臨時全黨大會에서 議定”, 「黨聲」, 37. 1935. 2. 1.
55. 雪友學人, “產業合理化運動과 相互協助의 精神은 무엇인가?”, 『朝鮮物產獎勵會報』, 1-8. 1930. 8.

56. 宋潤齋, “産業道德의 樹立을 切望함”, 『獎産』, 2-1, 1931. 1.
57. 韓昇寅, “美國의 實業界”, 『우라키』, 留美學生會十周年記念特大號, 1930. 6.
58. _____, “中小商業의 發展策”, 『朝光』, 1-2, 1935. 1
59. 住谷悅治, 『日本經濟學史の一』, 大烟書店, 1934.
60. 四方博, “市場を通じ見たる朝鮮の經濟”, 『朝鮮經濟の研究』, 刀江書院, 1929.
61. _____, “第二部 東洋社會經濟史 朝鮮”, 『社會經濟史學の發達』, 岩波書店, 1944.
62. 漢陽學人, “左傾教授·右傾教授 — 延禧專門學校教授層評(續)”, 『三千里』, 1931. 2.
63. “學術部隊의 參謀本部”, 『東亞日報』, 1935. 1. 1.
64. “五大學府出의 人才언·파렛트”, 『三千里』, 1932. 2.
65. “理論經濟學의 第1人 — 새우젓 장사 洪性夏 教授”, 『東亞日報』, 1930. 10. 16.
66. “千態萬象의 京城教育人物界”, 『開關』, 58, 1925. 4.
67. “朝鮮事情研究會 第一會調查報告講話”, 『朝鮮日報』, 1925. 11. 30.
68. “卷頭言”, 『獎産』, 2-1, 1931. 1.
69. 朝鮮總督府高等法源檢査局思想部, “三宅城大教授의 赤化運動事件”, 『思想彙報』, 2, 1935. 3.
70. 趙基, 『天道教青年黨小史』, 大同印刷社, 1935.
71. 澤村康, “土地政策의 目標”, 『農業經濟研究』, 13-3, 1937. 3.
72. 慶尙北道警務局 編, 『高等警察要史』, 1926.
73. 申泰煥, 『想念의 길목에서』, 正宇社, 1976.
74. 白樂濬, 『백낙준전집 9 — 회고록·강의록』, 연세대학교출판부, 1995.
75. 金乙漢, 『그리운 사람들』, 삼중당, 1961.
76. 李基俊, 『教育韓國經濟學發達史』, 一潮閣, 1984.
77. _____, 『韓末西歐經濟學導入史』, 一潮閣, 1985.
78. 高麗大學校, 『近代西歐學文의 受容과 普專』, 高麗大學校出版部, 1986.
79. 金容燮, 『韓國近現代農業史研究』, 一潮閣, 1992.
80. 박찬승, 『한국근현대정치사상사연구 — 민족주의의 우파의 실력양성론』, 역사비평사, 1992.
81.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82. 方基中,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4.
83. 金容燮, “日本 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敘述”, 『歷史學報』, 1966.
84. 安秉直, “舊韓末 經濟學 教育과 經濟學教科書에 관한 研究”, 『韓國教育史의 새 方向』, 韓國教育學會 韓國教育史研究會 編, 集文堂, 1982.
85. 趙璣濬, “韓國經濟學의 始源에 관한 研究”, 『韓國資本主義發展史』, 大旺社, 1991.
86. 小原敬士, 『アメリカ經濟思想의 潮流』, 勁草書房, 1951.

87. 주명건, 『경제학사:경제혁명의 구조적 분석』, 박영사, 1993.
88. 고정휴, “태평양문제연구회조선지회와 조선사정연구회”, 『역사와 현실』, 6, 1991.
89. 朱赫, 「'朝鮮事情研究會'의 연구」,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1991.
90. 김상태, “1920~30년대 同友會·興業俱樂部연구”, 『한국사론』, 28, 1992.
91. 장세운, “경성제국대학의 설립과 운영”, 『韓國獨立運動史研究』, 6, 1992.
92. 이준식, “백남운의 사회사 인식”, 『한국 사회사 연구의 전통』, 文學과학性社, 1993.
93. 홍성찬, “일제하 延專商科의 經濟學風과 '經濟研究會事件'”, 『연세경제연구』, 1, 1994.
94. _____, “한국 근현대 李順鐸의 政治經濟思想 연구”, 『역사문제연구』, 1, 1996.
95. 方基中, “白南雲의 學文과 思想”, 『연세경제연구』, 1, 1994.
96. 李秀日, “일제하 朴文圭의 經濟思想 研究”, 『역사문제연구』, 1, 1996.
97. 金聖甫, 「北韓의 土地改革과 農業協同化」,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98. 李秀日, 「日帝強占·解放期 印貞植의 經濟思想研究」, 연세대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2.
99. 白南雲, “빨럭運動의 今後”, 『東亞日報』, 1934. 5. 2.
100. 洪秉疇, “産業問題에서 살길로 나가자”, 『學海』, 1937.
101. 李秀日, “193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현실인식과 마르크스주의 이해”, 『韓國近現代의 民族問題와 新國家建設 — 金容燮教授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3』, 지식산업사, 1997.
102. 兪鎮午, 『養虎記』, 高麗大學校出版部, 1977.